

## I . 근대 언론활동

1. 근대 신문의 호시
2. 근대 언론의 발달
3. 언론의 구국투쟁

# I. 근대 언론활동

## 1. 근대 신문의 효시

### 1) 신문 발간의 배경

19세기 말 개화운동의 가장 구체적이면서 상징적인 결실은 신문의 발간이었다. 신문은 외국의 문물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여 자신을 수호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한 현대사의 중심기관이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은 정부기구인 博文局에서 발간한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이다. 전자는 1883년(고종 20) 10월 31일에 창간되었다가 이듬해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되었고, 그 뒤를 이은 후자는 1886년 1월 25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1888년 7월경에 폐간되었다.

열강 여러 나라들과의 접촉을 통해 개화가 시급함을 깨달은 조선정부와 지도계층은 국민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가장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신문의 발간이라고 판단하여 《한성순보》를 창간하였다. 신문 발간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는 열강 여러 나라들과 처음으로 수호조약을 맺기 시작하였다. 1876년 일본과 맺은 통상수호조약을 시초로 미국(1882), 영국(1883), 독일(1883), 그리고 러시아(1884)와 같은 서양열강들과 국교를 맺었다. 이러한 대외교섭의 과정에서 낙후한 국력을 신장해야겠다는 자각이 싹트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신문의 존재와 그 역할이 처음으로 소개되던 초기 단계에는 중국과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이 쓴 견문기에 신문이 개화에 긴요한 기관임을 기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1873년과 1874년 두 차례에 걸쳐 冬至使節의 일원으로 북경

을 방문한 姜瑋가 쓴 《北游談草》와 《北游續草》를 보면 북경의 관리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신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 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우리 나라 관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과 일본에 갔다 오면서 신문에 대해 좀더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1876년 1월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金綺秀는 귀국 후에 쓴 《日東記遊》에다 신문·종이·인쇄·사진 등 신문 또는 서적의 인쇄와 관련되는 건문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소개하였다.<sup>1)</sup>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던 嚴世永이 일본의 국정을 보고하는 가운데 “...원로원을 두고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며 신문지를 만들어 위로는 점차 군민이 서로 함께 다스리는 데까지 이르렀고, 조야의 논의도 가히 한 곳으로 귀일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이 조선정부의 관리들은 서양열강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계몽과 개화를 위해서는 신문이 매우 효과적이고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고 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이 같은 배경에서 발간되었다. 신문 발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세계 정세를 알리는 한편 선진국가의 정치·경제 및 문화제도를 소개하고 과학지식을 보급시키어 결국은 이 나라를 문명개화의 단계로 이끌어 보기 위한” 것이었다.<sup>3)</sup>

## 2) 《한성순보》의 창간

### (1) 박문국 설치

《한성순보》의 발행 준비는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朴泳孝 일행이 1883년 1월 6일에 귀국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박영효는 그 전해에 일본에 갔는데 귀

1) 金綺秀, 〈日東記遊〉(《修信使記錄》: 한국사료총서 9, 국사편찬위원회, 1958), 66·78~80쪽.

2) 嚴世永, 《見聞事件》(서울대奎章閣도서, 분류기호 1311-4-4).

3) 李光麟,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관한 一考察〉(《韓國開化史研究》, 일조각, 1974), 60쪽.

국하면서 신문을 발간할 준비를 해 가지고 왔다. 일본의 근대사상가이자 교육자요 언론인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추천으로 그가 설립 운영하는 慶應義塾 출신이면서 《時事新報》의 기자였던 우시바(牛場卓造)를 비롯하여 타카하시(高橋正信), 이노우에(井上角五郎)와 경응의숙에 유학중이던 兪吉潛을 데리고 왔던 것이다.

박영효는 일본에서 돌아온 지 한달 만인 1883년 2월 6일 한성판윤에 임명되어, 같은 달 28일에는 고종으로부터 한성부(오늘의 서울시)에서 신문을 발간하라는 하교를 받았다.<sup>4)</sup> 이리하여 박영효는 유길준에게 그 실무작업을 맡겼다. 유길준은 2월 27일 통리아문의 주사로 임명되어 박영효가 일본에서 데리고 온 기자 3명과 함께 신문 발간을 준비하게 되었다.

유길준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尹致昊·柳定秀와 함께 유학생으로 남아 경응의숙에서 1년 반 이상 공부했던 경력이 있었으므로 경응출신 일본기자들과 함께 신문을 발간하는 일을 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유길준은 한성부에서의 신문 발간에 필요한 기구와 그 인원 등을 규정한 〈한성부 신문국 장정〉을 비롯해서 신문 창간사와 신문에 대한 해설문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sup>5)</sup>

그러나 박영효는 한성부에서 신문을 창간하기 전인 4월 10일 불과 2개월의 단명으로 한성판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신문 발간의 실무를 맡았던 유길준도 신병을 이유로 4월 16일 통리아문의 주사직을 사임하고 말았다. 박영효-유길준이 사임하여 신문 준비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으므로 박영효를 따라 왔던 우시바와 타카하시 두 사람은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고<sup>6)</sup>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나이가 젊은 이노우에 한 사람만 그대로 남아

4)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1월 21일.

5) 〈漢城府新聞局章程〉과 신문 창간사, 그리고 신문에 대한 해설문을 누가 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한 견해는 이 글들을 牛場卓造나 高橋正信 두 사람 중 하나가 쓴 것으로 보았다(崔竣, 《韓國新聞史論攷》, 일조각, 1976, 17~18쪽의 註 2와 3 참조).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新聞局章程은 유길준이 혼자서 작성한 것이라고 간단히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창간사와 신문 해설문은 유길준이 쓴 것으로 단정하고, 그렇다면章程도 그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았다(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63~64쪽).

6) 牛場卓造가 東京에 도착한 날은 5월 20일이었다 하니 유길준 사임 직후 牛場

있게 되었다.

신문 발간을 계획하고 고종의 허락을 받아 이를 추진하던 박영효와 유길준을 비롯한 실무진이 사임한 후 신문 발간의 업무는 한성부에서 통리아문으로 이관되었다. 통리아문은 조선정부 최초의 근대식 외무기관이었다. 정부는 수신사 일행이 돌아온 직후인 1월 12일 統理機務衙門의 명칭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개칭하고 이튿날인 1월 13일에는 통리아문의 한 기구로 同文學을 설립하였다.<sup>7)</sup>

동문학은 중국의 同文館과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로, 외국어교육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2월에 통리아문의 장정이 제정될 때에 동문학에서 서적을 간행하고 아울러 新聞報館을 개설한다는 조문이 들어 있었으므로<sup>8)</sup> 이 기관에서 신문 발간을 맡게 된 것이다.

8월 17일에는 동문학의 부속기구로 박문국을 새로 설치하였다.<sup>9)</sup> 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사는 통리아문의 동문학 부속기관인 박문국인데, 荳洞에서 정식으로 개설된 것이다. 이제 신문 발간의 준비가 통리아문의 부속기관인 박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문국이 설치되고 金寅植이 주사로 임명된 후, 9월 7일에는 張博·吳容默·金基駿을 박문국 근무의 司事로 임명하여 실무진을 갖추었다. 이어서 9월 20일부터는 신문 창간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문 발간의 준비는 박문국이 설립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9월 11일(음력 8월 11일)자 《統署日記》에 김인식이 신문 抄役하느라고 통리아문에는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무렵부터 벌써 외국의 신문을 가져다가 순보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공식적인 업무는 9월 20일(음력 8월 20일)부터였다.<sup>10)</sup>

는 일본으로 떠났을 것이다(李光麟, 위의 책, 100쪽).

7)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2월 4일·5일. 한편 同文學의 설립일에 대해서 金允植의 《陰晴史》에는 임오년 11월 21일(양력 1882년 12월 30일)에 설립된 것으로 쓰여 있다.

8) 全海宗, 《韓國近世外交關係文獻備考》(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66), 15~16쪽.

9)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7월 15일.

《日省錄》, 계미 7월 15일.

《草記》, 계미 7월 15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끝에 1883년 10월 31일(음력 10월 1일) 마침내 《한성순보》가 창간되었다. 순보는 일본에서 들어온 인쇄기계와 활자로 인쇄하여 A4판 비슷한 판형 24쪽의 책자형으로 제작되었는데 사용문자는 순 한문이었다. 한문만으로 신문을 발간한 것은 오늘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신문을 사서 읽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 신분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한문을 공부하였으므로 한문으로 신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불편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한글로 제작한 신문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한성주보》의 발간 때에 한글을 사용해 보았으나 한문 전용 신문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이 때에는 독자가 주로 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으며 1894년의 갑오경장 이전까지는 공용문자도 한자였던 것이다.

순보와 주보는 판형이 오늘의 전화번호부 크기였고, 책자형으로 묶어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잡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외형만을 보고 잡지라 할 수는 없고 당시의 인쇄기술과 용지 사정 때문에 책자형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발간의 취지나 내용으로 볼 때 틀림없는 신문이라 해야 마땅하다. 중국과 일본에서 발행되던 초창기 신문들도 대개 책자 형태였으나 모두 신문으로 친다. 순보가 발간되던 저동의 박문국은 명동 천주교성당 건너편 중앙극장 근처였다.<sup>11)</sup>

## (2) 신문 발간의 목적

신문의 등장은 조선사회의 개화에 큰 자극제가 되었고 관리와 지식인들의 시야를 세계무대로 넓혀 주었다. 신문 발간의 목적을 당시에 발행된 순보와 주보의 기사 가운데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聞見을 넓힌다. 순보는 창간사에 해당하는 〈순보서〉에서 국민들이 내외의 정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예전에는 산천

10) 창간호에 실린 〈本局公告〉란을 보면 저동에서 업무를 개시한 것은 9월 20일(음력 8월 20일)부터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11) 《京城府史》(1934), 525쪽에는 박문국의 위치를 黃金町(현 亭洞) 2丁目 168번지 京城憲兵隊 관사 자리라고 했다.

이 막혔고 문물과 제도가 서로 달라서 다른 나라 사이에 교류가 없었으나, 이제는 교류가 빈번하여 세계 각국이 이웃 나라와 다름이 없게 되었으므로 정부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외국의 신문(外報)을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의 기사(內事)까지 기재하여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열국에까지 반포하여 (국민의) 문견을 넓히려” 한 것이라고 창간 의도를 밝히고 있다. 주보에서도 ‘신문은 국민의 이목’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떻게 하면 6주의 넓은 곳을 또는 만국의 대중을 한눈과 귀로 모두 듣고 살필 수 있겠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6주와 전신을 통하고 만국과 문호를 개방하여 널리 묻고 자료를 수집하여 날로 이목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신보 뿐이다(《漢城周報》24호, 1886년 8월 16일 〈新報論〉).<sup>12)</sup>

둘째, 국민을 敎化한다. 주보의 창간호부터 실린 〈本局 公告〉를 보면 “본보는 바로 私記이니 공평한 의논과 훌륭한 지식으로 세상을 깨우치고 백성을 교화하려” 한다고 천명하였다. 창간사에서든 신문 발간의 목적이 백성의 교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보는 또한 “신문은 새로운 것을 들음으로써 날로 혁신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서양말을 인용하여<sup>13)</sup> 개화파들이 생각하던 신문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다.

셋째, 부국강병. 신문은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나를 아는 것이 적을 아는 것이다”라 한 옛 사람의 말대로 신문은 안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밖으로는 외국의 모욕을 막고 전쟁을 없앨 수 있다.<sup>14)</sup> 그 동안 폐쇄된 쇄국정책으로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에 어두워 발전된 서양문물에 뒤떨어져 있음을 반성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주보에 실린 〈신보론〉의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아, 신보 개설의 이익됨이 어찌 문견을 넓히는 데만 국한되겠는가. 저 구주 각국들은 땅이 그다지 넓지도 못하며 백성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데도 부강을 독

12) 이하 번역문은 《漢城旬報 漢城周報 翻譯版》(寬勳클립信永研究基金, 1983)에서 인용하였다.

13) 《漢城周報》30호, 1886년 9월 27일 〈論新聞紙之益〉.

14) 《漢城周報》1호, 1886년 1월 25일 〈周報序〉.

접하여 6주를 위압하는 것은 역시 신보를 통해 백성을 깨우쳐 날마다 발전하여 만국의 좋은 것을 듣고 보게 하여 총명을 집중시켜 새로운 것을 도모하게 한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저들과 같이 신보를 간행하여 백성들의 이목을 깨우쳐 주면 백성이 날로 富해질 것이며, 국가도 날로 강해져서 장차 천하를 호령하는 수레를 타고 저 서인들의 앞에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漢城周報》24호, 1886년 8월 16일 〈新報論〉).

넷째, 下意를 상달한다. 신문은 국민들의 고통을 찾아내어 막힌 것을 제거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다 게재하여 정치가 上理에 도달하게 하는데 있다. 비록 서양의 제도를 본받아 신문을 발간하지만 신문이 가진 기능은 옛날 우리의 정치체도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문국을 창설하여 신문을 발간하는 것은 옛날 임금의 箴諫을 訓誨하던 법을 도습하여 취한 것으로써, 다만 서양의 體例를 모방하였을 뿐이다. 下情을 상달시켜 임금과 백성(君民)이 일체가 되게 하려는 것이 신문 발간의 취지이다.<sup>15)</sup>

다섯째, 商利에도 도움을 준다. 신문은 상업의 발달을 촉진하며 광고매체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농상공을 비롯하여 기타 모든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와서 局員에게 자문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신문을 구독하는 내외의 선비와 상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주보의 〈본국 공고〉는 밝히고 있다. 돈을 내고 신문에 광고를 하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사업을 알리려는 사람은 신문을 활용하라는 의미였다. 실제로 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광고는 1886년 2월 22일에 발행된 주보 제4호부터 실리기 시작하였다. 독일 무역상 世昌洋行(Edward Meyer & Co.)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제22호에서는 일인의 염색약과 洋木, 각색 양단 등의 광고도 실었다. 아직 다양한 광고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일과 일본회사의 광고와 同壽館이라는 약국 광고도 실렸다.

### (3) 필화와 중국과의 관계

순보는 준비과정과 기계 구입을 비롯하여 실제 제작에도 일본과 밀접한

15) 《漢城周報》30호, 1886년 9월 27일 〈論新聞紙之益〉.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측은 상대적으로 소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중국은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순보가 중국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했을 때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884년 4월 13일 중국은 순보 제10호(1월 30일자) 〈국내사보〉란에 게재된 〈華兵犯罪〉라는 기사와 제11호(2월 7일) 〈華兵懲辦〉이라는 기사에 대해 조선정부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왔다. 문제된 기사는 종로 광통교 옆에 있는 약방에서 중국병정이 살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은 조선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중국군에 관해서 근거 없는 기사를 실었다고 항의한 것이다.

조선정부는 4월 19일자로 회답을 보냈다. 내용은 박문국에 기사 게재의 전말을 물어 본 결과 범인이 중국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해서 기사를 쓴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문제가 된 기사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요지의 회답을 보내면서도 중국에 대해 떳떳한 태도로 나오지는 못하였다. 정부기관인 박문국에서 떠도는 소문에만 의거하여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일이며, 박문국원들은 이를 자책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인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중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조선으로서는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실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측은 이를 뒤인 4월 21일에 다시 조회하기를 조선측의 회답에서 단지 박문국 순보의 착오라고만 말했을 뿐으로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중국측은 범인 체포를 위해서 현상금을 걸었으며, 중국상인들의 야간통행을 금지하였으니 이를 널리 알리라고 요구하였다.

기사가 나간 지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말썽이 일어난 이 필화사건은 중국측의 4월 21일자 조회가 마지막이었고, 조선정부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종로 거리와 성문 각 곳에 범인 체포를 위한 고시를 널리 게시했다는 사실을 5월 3일자로 중국측에 알리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sup>16)</sup> 이 필화사건은 순보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

에 낀 조선정부의 미묘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발단부터 다시 살펴보면 중국은 사건을 보도한 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공식적으로 문제삼으면서도 “중국과 조선은 원래 한 나라처럼 지내 왔으므로 소원한 다른 나라의 예를 援用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중국은 조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순보가 발행되고 있던 때에는 벌써 양국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져 있었던 것이다.

### 3) 《한성주보》의 발간

#### (1) 순보와 주보의 차이

순보는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창간된 지 1년 남짓 만에 발행이 중단되었다.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 순보가 발간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변의 와중에 박문국을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순보의 마지막 호는 1884년 10월 9일자로 발행된 제36호이다. 36호 이후 갑신정변이 일어난 12월까지 열흘마다 계속 발행되었다면 다섯 호가 더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제41호가 된다. 그러나 남아 있는 신문은 36호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36호를 발행한 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발행이 중단되어 있던 상태에서 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36호 이후에는 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12월 4일까지 계속 발행은 되었지만 마지막 5호는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 내려온 것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거나 갑신정변 이후에는 박문국이 파괴되었으므로 신문 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6개월 뒤인 1885년 5월경부터는 박문국을 중건하고 신문을 발간하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복간 준비를 신속히 할 수 있었던 것

16)) 《舊韓國外交文書》8권, 淸案 1(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70쪽 이하.  
《統署日記》, 고종 21년 3월 20일 이하 참조.

은 신문의 복간을 바랐던 당시의 여론 때문이었다.

창간호에 실린 <주보서>에는 순보가 발간되기 전에는 불편함을 모르고 지냈으나 간행되던 순보가 중단되니 겨우 띄웠던 이목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간행을 바랐다. 왕이 박문국을 다시 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도록 한 결과 모두들 다시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파괴된 신문사의 시설을 복구하고 일본에서 인쇄기계를 다시 도입하여 1886년 1월 25일에 《한성주보》 제1호가 나오게 되었다. ‘순보’에서 ‘주보’로 제호가 바뀌었고 제1호부터 새로 창간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은 순보와 주보는 하나의 신문이었다. 단지 발행이 중단된 순보를 복간한 것일 뿐이지만 발행의 간격이 10일(순간)에서 7일(주간)로 달라졌으므로 제호가 주보로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순보와 주보는 하나의 신문이지만, 주보는 순보에 비해 몇 가지 점에서 더욱 발전된 기능과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주보는 발행의 간격을 1주일에 한 번씩으로 단축하였다. 발행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속보성을 강화하여 뉴스를 더욱 신속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지금까지 동양의 음력을 기준으로 한 생활단위로 열흘마다 내던 신문을 서양식 생활단위에 따라 1주일에 한 번씩 내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화에 접근하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셋째, 한글기사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보의 기사는 세 가지 종류였다. ① 한자 전용, ② 국한문 혼용, ③ 한글 전용의 3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주보에 국한문 혼용과 한글 전용 기사를 실은 것은 신문의 대중화를 지향한 조치였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뜻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한글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자정책의 혁신을 의미하는 일대 용단이었다.

세 가지 종류의 문자별 기사를 분류해 보면 제1호·제2호에는 국한문 혼용기사가 10건 이상씩이나 있어서 한글 전용기사와 합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글 전용과 국한문 혼용기사의 게재 비율의 확고한 기준은 없었다. 한글을 사용하는 ②와 ③의 기사는 호가 거듭될수록 점차 줄어들

어서 1년쯤 후에는 《한성순보》와 마찬가지로 한문만 사용하는 신문이 되고 말았다. 주보의 한글 사용 의지는 아직은 시대상황보다 한 걸음 빨랐고, 한글의 대중화는 시기상조였던 셈이다.

넷째, 발행횟수의 증가와 체제의 변화 등을 위해서는 박문국의 신문 제작진이 상당히 늘어났다. 순보와 주보는 정부기관에서 발행되었으므로 이 신문을 만들던 사람들의 신분은 정부의 관리였다. 비록 관리들이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우리 나라 최초의 기자들이었다. 기자가 늘었다는 것은 언론 발전의 저변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주보에는 논설격인 <사의>란이 신설되어 의견 기사를 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주보가 순보에 비해 신문의 논평 및 의견제시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근대 신문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보는 이와 같이 순보에 비해 발전된 형태였지만 편집체제는 순보와 비슷하였다. <국내기사>에 이어 <私報>·<外報>·<私議>·<集錄>의 순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외보>는 외국소식으로, 순보의 <근사>와 같고 <사의>는 논설에 해당하며, <집록>은 논문 또는 피처(feature)기사라 할 수 있다. 기사의 전체 건수를 비교해 보면 <외보>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국내기사>보다 외국소식에 더 비중을 두었음은 순보와 마찬가지로이다.

주보는 의견 기사를 신설하는 동시에 외국관계 기사인 <각국근사>의 비중은 줄이고 국내 기사를 늘렸다. 순보와 주보의 기사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순보와 주보의 기사 건수 비교(괄호 안은 백분율)

순보	국내관보	국내사보	각국근사	논 설	집 록	시치탐보	사 고	계
36호	342 (21.3)	72 (4.49)	1,021 (63.7)	11 (0.69)	117 (7.3)	35 (2.2)	35 (2.2)	1,602 (100)
주보	국내기사	사 보	외 보	사 의	집 록	시치탐보	사고광고	계
39호	540 (41.57)	6 (0.46)	581 (44.73)	22 (1.69)	62 (4.77)	39 (3)	49 (3.77)	1,299 (100)

\* 전거 : 정진석, 《한국언론사》(나남, 1990), 65~85쪽.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순보에는 <국내관보>가 21.3%에 지나지 않았으나 주보에서는 41.57%로 배가 늘어났다. 반면에 <각국근사>(외보)는 63.7%에서 44.73%로 떨어졌다. <논설>과 <집록>도 외국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순보의 <각국근사>와 <논설>·<집록>을 합친 외국기사는 70%가 넘고 주보도 <외보>와 <집록>을 합치면 외국기사는 50%가 넘는다.

## (2) 국내소식과 의견기사 증가

주보의 외국기사가 순보에 비해 줄어든 것은 신문을 주간으로 발행하면서 뉴스매체로서의 기능과 영향력이 더 확대되었다는 사실과, 주보가 발행될 때에는 정보의 소통이 다소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보에는 광고가 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사실이다.

순보와 주보는 국제정세와 외국의 제도·문물·역사를 비롯하여 과학·지리·천문 등에 이르는 광범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신문 발간의 목적이 국민의 견문을 넓히고 국민을 교화하여 나라를 부강케 하여 외국의 침략을 막자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편집방침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편집은 잡지와 비슷한 형태로도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서양의 과학·지리·천문 등을 소개하는 기사도 새로운 뉴스였다. 보도기사에서 해설기사·피처·논설이 미분화상태로 혼합된 형태였던 것이다.

순보와 주보가 다룬 기사 가운데는 각 나라의 현황과 문물을 소개한 것이 많았다. 어느 나라에 관해 많이 다루었을가를 살펴보면 순보-주보의 성격과 당시 신문을 만들던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순보와 주보는 국민의 견문을 넓힌다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외국의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이 통계숫자로 나타난 바와 같다. 그러면 당시 신문을 만들던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고자 했던 외국은 어떤 나라들이었을까. 또는 개화의 표본으로 삼고자 했던 선진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순보에서 가장 많이 다룬 나라는 중국이었다. 순보의 <각국근사>를 분석해 보면 중국에 관한 기사는 435회나 게재되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압도적인 횟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월남(165)·프랑스(71)·영국(56)·일본(53)·미국(47)·러시아(42)·독일(26), 그리고 막연히 ‘서양’으로 보도한 기사가

33건 등의 순이었는데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기사에 나타난 외국

	중 국	일 본	영 국	미 국	프랑스	러시아	독 일	월 남	서 양
한성순보	435	53	56	47	71	42	26	165	33
한성주보	94	95	36	45	34	32	29	27	26

\* 전거 : 정진석, 《한국언론사》, 76~77쪽.

전체적으로 보아서 중국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신문 제작에 참고로 하였던 신문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행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는 서방 열강국들이 진출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어 많은 뉴스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이유와 함께 중국은 우리나라와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였으므로 중국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렸을 것이다.

월남과 프랑스에 관한 기사가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시 월남에는 프랑스군이 침입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분쟁지역으로서의 뉴스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들이 藩屬國인 월남사태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루었던 것이 순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중국과 월남에 대한 기사가 많기는 하였지만 전쟁 또는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들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영국·미국 등 서양 여러 나라와 일본에 대한 기사는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뉴스로 다루었다.

주보에서는 일본에 관한 기사가 중국과 거의 비슷한 횟수로 많이 게재되었다. 순보를 처음 만들던 때에 비해 일본은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이 신문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95)·중국(94)에 이어 미국(45)과 러시아(32)를 순보 때와 비교해서 더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 밖의 영국(36)·프랑스(34)·독일(29)의 순으로 서양 선진국의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으며, 이들 나라 외에 순보와 주보에서 다 같이 이탈리아, 인도 그 밖의 여러 나라들도 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도 많았다. <집록>의 대부분이 서구 선진국의 과학 기술에 관한 해설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글이다. 순보의 기사 가운데는 <집록>이 117건(7.4%), 주보에서는 62건(4.77%)인데, 한 기사의 길이가 <국내기사>나 <각국근사>에 비해 월등히 길다. 그러므로 지면을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많다. 과학기술 기사 가운데는 우리 나라 학자들에게 커다란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에서부터 천문학·화학·의학·상업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sup>17)</sup>

### (3) 기사의 출처

① 국내기사 : 순보의 <국내관보>와 <국내사보> 그리고 주보의 <국내기사>는 주로 국왕의諭旨, 의정부에서 왕에게 올리는 啓, 각 지방에서 올라온 장계 등의 관청기사이다. 지방이나 유생들이 올리는 상소문을 모두 신문에 실을 수는 없었으므로 순보 제33호(1884년 9월 10일)에는 으레 올리는 상소문을 신지 말라는 왕의 유지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주보의 국내기사는 <朝鮮報>를 인용한 경우도 더러 있었고, 매호에 실리는 <時直探報>는 그 때의 물가시세를 취재한 것이다.

② 외국서적 : 순보와 주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각국근사>와 <집록> 등 외국관계 기사는 외국의 신문, 잡지 및 단행본에 실린 것을 옮겨 실었다.

③ 외국신문 : 순보와 주보는 중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을 주요 뉴스원으로 이용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신문 외에는 영국에서 발간된 신문을 많이 인용하였다. 영국의 <The Times(泰晤士日報)>와 <Reuter(路透)>도 있었고, 미국·프랑스·러시아·독일 등의 구미열강 선진국 신문들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인용된 나라의 여러 신문들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 발간된 것들은 번역이 가능했겠지만, 서양의 신문은 직접 번역이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양어를 능통하게 번역 또는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1883년에

17) 朴星來,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의 近代科學 受容 노력>(<新聞研究>, 1983년 겨울호), 39~73쪽.

보병사가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는 없었으며,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을 세운 것은 순보가 창간되던 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보와 주보는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을 보고 외국 기사를 만들었다. 서구어 신문을 인용한 기사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간된 신문 기사를 간접 인용하면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썼을 것이다. 다만 기사에 따라서는 간접 인용임을 밝힌 경우도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신문에서 重譯의 절차에 따라 서양의 소식과 문물제도 등을 소개했지만, 개화의 모델로 삼고자 했던 서양 각 나라의 신문과 서적들에 실린 내용을 폭넓게 수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4) 박문국의 운영

##### (1) 발행부수

순보와 주보의 내용 및 이를 제작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는 문제 못지 않게 궁금한 일은 도대체 이 신문이 몇 부나 발행되어 어떤 사람들이 읽었느냐 하는 점이다. 박문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특별한 종류의 세금을 징수하여 충당하는 방법과, 신문 대금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수입원이 있었다. 순보와 주보의 발행부수에 따른 구독료는 신문의 경영면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발행부수는 이 신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을까를 살펴보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인쇄사정, 당시의 행정제도와 경제적인 여건, 종이의 소비량, 우편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신문의 배포와 보급방법은 京主人(또는 京邸吏)과 營主人(또는 營邸吏)을 통해서 전국의 지방행정 단위로 신문을 보내고 구독료도 그들을 통해서 징수하였다. 근대적인 우편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신문 보급은 행정조직을 통하고 그 구독대상도 일차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순보의 전체적인 발행부수를 정확히 밝힌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통리아문의 일지인 《統署日記》에는 순보와 주보의 보급방법 및 그 발행부수를 추측할 수 있는 기록들이 간헐적으로 눈에 뜨인다. 지방관청에서 구독료를 올려 보낸 금액이 있는데 이를 역산하여 발행부수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단편적으로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매호 3,000부 정도가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sup>18)</sup>

구독자 가운데는 일인들도 있었다. 일인들은 한국의 정세를 알기 위해서도 신문을 보았겠지만, 상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물가시세를 적은 〈시치탐보〉를 영업상 참고로 하였을 것이다.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 외국의 문물을 소개하고 정부의 시정방침과 각 지방의 장계, 관리들의 임면, 물가동향 등을 폭넓게 알리려 했던 근대 신문인 순보와 주보의 발행부수 3천여 부는 의외로 많았던 것이다. 독자대상은 주로 관리들이었지만 전국 각지에 고루 보냈으며 일반인과 외국인들까지 읽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신문이 우리 나라의 개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던 것이다.

## (2) 주보의 폐간

신문을 발간하고 박문국을 운영하는 경비는 구독료 외에 특별세를 거두어 충당하였다. 그러나 박문국의 경영상태는 원활하지 못하였다. 구독료의 미수, 세금의 체납 등으로 경비가 충분하지 못한 데다가 지방에서 구독료를 징수하는 경주인들의 폐단도 있었다. 순보를 창간하기 전부터 경주인들이 박문국 경비 세금을 걷는 일로 말썽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지만,<sup>19)</sup> 그 후로도 신문 구독료 걷는 것을 핑계로 경주인들의 행패가 적지 않았다.

당시는 박문국만이 아니라 통리아문의 또 다른 기구인 育英公院 등의 경비도 거둬들여야 했으므로 지방관서에서도 몹시 번거로웠을 것이고, 민간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폐단과 경영난은 박문국의 존폐문제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지경을 초래하고 말았다. 1888년 7월 14일 내부는 박문국을 철폐하여 통리아문에 통합시키기로 하고 왕의 허락을 얻었다.

18) 발행부수를 밝힌 근거와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정진석, 앞의 책, 90~97쪽 참조.

19) 《統署日記》, 고종 20년 9월 10일·10월 9일.

박문국은 1883년 8월 17일에 창설되어 5년 동안 신문을 발간하고 개화사상의 전파와 외국의 문물 및 학문 소개에 큰 공적을 남겼으나 이를 통리아문에 통합시키도록 된 것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주보의 마지막 호수는 1888년 3월 12일자로 발행된 제106호이다. 이 때부터 매주 한 호씩 발행되었다면 박문국이 폐지된 7월 14일 무렵까지는 제123호가 나왔을 것이다. 주보의 발행일자는 매주 월요일이었는데 7월 9일이 월요일이었다.

박문국에서는 단행본도 출판하였다. 박문국에서 발간하여 현재 남아 있는 단행본으로는 《萬國政表》가 있다. 1887년 1월경에 출간된 것으로 보이는 이 책은 4책 343쪽에 51개 나라의 정치·종교·토지·인구·재정·병제·통상 및 공업 등의 정세를 소개하였다. 조선과 중국에 관한 내용은 두 나라의 典獻에 의하고, 일본과 각국에 관한 것은 1886년도의 《영국정치연감》을 번역 편찬하였다고 〈범례〉에서 밝히고 있다. 박문국에서는 다른 간행물도 더러 인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 5) 개화와 국민교화의 기능

순보와 주보를 발행하던 당시 사람들은 서양이나 중국 또는 일본의 신문을 단순히 모방하여 신문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도 우리의 정치제도와 정치사상으로 신문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제도를 답을 수 있는 서양식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그릇을 도입하고 이를 근대식으로 구현하였을 뿐이라고 보았다.

신문이 국민의 견문을 넓혀 나라에 이익이 되게 한다는 생각은 그 후의 민간신문에도 계승되었고, 순보와 주보를 제작하던 사람들은 신문이 폐간된 뒤에 정부의 중책을 맡아 개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초기의 제작진인 김만식·장 박·남정철·여규형·유길준 등이 모두 대신급의 중책을 맡았고, 유길준은 후에 정부에서 서재필의 《독립신문》발행을 지원하도록 도와 주었다. 주보의 기자였던 吳世昌은 한말에는 《萬歲報》(1906. 6. 17)와 《大韓民報》(1909. 6. 2)의 사장을 지냈고, 광복 후에는 《서울신문》의 초대 사장을

역임하였다.

한글 사용도 이미 주보에서 시도되었던 것이다. 순보와 주보의 발간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와 그의 문하생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간여했던 사실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사실 이상으로 과대평가 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신문 발간의 중심 인물들은 여규형·고영철 등 박문국의 관리들이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신문 발간에 자극을 준 것은 일본이었지만, 순보의 뉴스원이나 그 내용은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작과 관련된 인물들을 보더라도 주보를 발간할 때 통리아문의 독판이었던 김윤식은 영선사로 중국에 갔다 오면서 신문 발간의 자료로 쓸 서적과 신문 등을 가져 왔으며, 영선사 일행이었던 고영철도 신문 발간에 참여하였다.

제작진들은 모두 한학에 능통했으므로 서양신문을 직접 읽을 수는 없었지만 중국에서 발간된 신문을 통하여 서양사정을 소개했던 것이다. 인용된 뉴스원을 보더라도 일본신문보다는 중국의 신문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순보와 주보를 정부기구에서 발간했다는 이유로 관보로 생각하고 최초의 신문을 《독립신문》부터라고 보려는 사람도 있으나, 초창기의 신문은 정부가 발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발행하였더라도 순보와 주보의 편집내용을 보면 관보라는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순보와 주보는 민간에서 발행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당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만든 신문이었으며, 이는 기사의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명백하다.

《한성주보》가 폐간된 뒤로는 신문 없는 시대가 8년 동안 계속되었다. 1896년 4월 7일 본격적인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한국신문의 전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독립신문》은 순보와는 달리 한글 전용으로 제작되었고 민간신문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서재필의 신문 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성 순보와 주보를 발간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문이 개화와 국민교육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재필의 신문 발간을 적극 지원한 사람은 내부대신이 되어 있던 유길준이었다. 유길준은 순보

창간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었으니 신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순보와 주보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결국 독립신문도 순보와 주보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고 그 발간 정신이 계승되어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鄭晉錫〉

## 2. 근대 언론의 발달

### 1) 민간지 등장의 시대적 배경

민간신문의 시대는 1896년(건양 1) 4월 7일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1883년부터 박문국에서 발간한 《한성순보》였지만 민간인이 신문을 창간하여 구독료와 광고료의 수입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은 《독립신문》이 처음이었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종류의 민간지들이 나오게 되었다.

비슷한 때에 일인들도 우리 나라에서 한국어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계통에서도 인쇄시설을 갖추어 주로 종교관계 출판사업을 시작하면서 주간신문을 발행하여 신문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 무렵에 잡지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발행한 영문잡지 《코리안 리포지토리(The Korean Repository)》(1892년 1월)를 비롯하여, 일본유학생들이 동경에서 발간한 한국어 잡지 《친목회회보》(1896년 2월)와 독립협회의 기관지 《대조선 독립협회회보》(1896년 11월)도 나왔다. 이와 같이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창간된 1896년을 기점으로 민간신문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독립신문》의 창간은 정치적인 변혁과 사회운동사의 관점에서도 혁신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지만, 국어운동사에도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하였다.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의 띄어쓰기로 신문을 제작하여 그 이후에 나타난 한말의 여러 민간신문들이 이를 뒤따르게 되었고, 한글이 공용문자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개화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880년대부터였는데 초기 개화운동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한성순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운동은 소수의 선각자들이 국민들에게 개화사상을 불어넣어 주려 했던 이른바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890년대는 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사회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됨으로써 횡적으로 확산되는 대중화운동으로 발전되어 나아갔다.

이처럼 1890년대의 개화운동을 1880년대와 다른 차원으로 발전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독립신문》이었다. 국민들은 이 신문에 실린 논설과 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되었으며, 또 독립정신과 비판정신을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립신문》이 창간된 시기에 일본은 침략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반도 진출의 야욕을 지닌 러시아와도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일본은 1894년의 청일전쟁으로 중국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었으나 조선정부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이듬해 10월에는 궁중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1896년 2월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俄館播遷)하여 러시아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었으며, 서구열강 여러 나라들은 각종 이권을 탈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력침략과 병행하여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경제 침략과 언론침략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일본은 1895년 2월 15일(2월 17일이라는 설도 있다)부터 서울에서 《漢城新報》를 발행하여 언론침략을 위한 전위기구로 삼고 있었다.

은둔의 작은 왕국이었던 조선은 열강의 침탈과 밀려 들어오는 서구문물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독립된 자주국가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열강의 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할 능력과 경륜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서캐필은 망명지 미국에서 돌아와 신문을 발행하였던 것이다.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던 시기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국권의 회복과 정치 사회의 개혁을 지향하면서 국민계몽과 민권의 신장을 위한 횃불을 높이 들어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민중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독립 협회가 민중의 지지에 힘입어 개혁을 추진한 것도 《독립신문》과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신문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 2)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

### (1) 서재필의 망명과 귀국

서재필은 1864년 1월 7일(음력 1863년 11월 28일)에 태어나서 1882년 음력 3월에 실시된 과거(別試 文科)에 합격하였다. 그는 이듬해 5월 일본으로 건너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경영하는 慶應義塾에서 6개월간 일본어를 배운 뒤 도야마(戸山)육군학교에 들어가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듬해인 1884년 7월 말에 귀국하여 士官長에 임명되었는데, 이 해 12월 4일 김옥균·박영효·서광범 등의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sup>1)</sup>

서재필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망명객의 처지가 되어 미국에 체류하면서 1892년에는 워싱턴시에 있는 콜롬비안의과대학(Columbian Medical College)을 졸업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하였다. 1890년 6월에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동안에 국내의 정치정세는 바뀌었다. 1894년의 갑오경장과 함께 친일내각이 성립되면서 갑신정변에 가담하였던 망명객들에게도 사면령이 내린 것이다. 이제 서재필에게도 귀국의 길이 열렸다.

서재필은 1895년 12월 말에 귀국하였다. 그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귀국 직후 1896년 3월에 발행된 《코리안 리포지토리》에 정부는 국민의 실정을 알아야 하고 국민은 정

1) 李光麟, 〈徐載弼의 開化思想〉(《韓國開化思想研究》, 一潮閣, 1979), 93~149쪽 참조.

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을 실었다.<sup>2)</sup> 정부와 국민의 상호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였다.

서재필은 귀국 직후 조선정부의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10년간 월봉 300원의 보수를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서재필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은 정부의 월급을 받는 중추원 고문직보다는 《독립신문》의 발행이었다. 그는 또한 독립협회의 창립과 그 운영, 독립문의 건립, 그리고 배재학당에서의 강의 등에도 정열적으로 헌신하였다.<sup>3)</sup>

조선정부는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신문의 창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신문사 설립자금 3,000원과 개인 생계와 가옥임대비 명목으로 1,400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서재필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은 모두 4,400원이었다.<sup>4)</sup> 서재필은 중추원 고문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매월 3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생계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이리하여 서재필은 귀국한 지 3개월 만인 1896년 4월 7일에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당시의 교통·인쇄시설·신문제작에 필요한 인적 자원 등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는 매우 짧은 시일에 신문을 창간한 것이다. 이처럼 단시일에 신문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초기에는 감리교 계통의 인쇄소인 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에서 신문을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 서재필의 신문 발행을 지원한 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문 발행을 지원한 또 다른 목적은 일본인이 발행하고 있던 《漢城新報》와

2) Philip Jaisohn, What Korea Needs Most, *The Korean Repository*, Mar., 1896, pp. 108~110. 그는 11월 30일에 발간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창간호에 게재한 〈공기〉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李光麟, 〈徐載弼의 開化思想〉 (앞의 책, 一潮閣, 1979), 111~136쪽.

——, 〈徐載弼의 독립신문 刊行에 대하여〉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79), 152~198쪽.

愼鏞廈, 〈독립신문의 創刊과 그 啓蒙의 役割〉 (《獨立協會研究》, 一潮閣, 1976), 1~80쪽.

4) 愼鏞廈, 위의 책, 9~17쪽.

대항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한성신보》는 《독립신문》보다 1년 전인 1895년 2월에 창간되어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논조로 발행되다가, 을미사변 때에는 명성황후 시해의 비밀근거지로도 활용되었고, 《독립신문》이 창간된 직후 4월 17일자 지면에 고종의 아관파천을 비롯한 내용의 〈동요〉라는 것을 실어 국민들을 격분케 하였다. 조선정부에서 이 동요를 문제삼아 일본에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sup>5)</sup>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독립신문》의 창간자금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신문사의 사옥을 제공하고 우송요금의 할인과 취재활동에도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 《독립신문》은 이와 같이 서재필의 생각과 조선정부의 인식이 일치하였으며<sup>6)</sup> 서재필의 뛰어난 식견과 개화에 대한 열망과 추진력으로 창간된 것이다. 정부는 신문의 창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제작과 경영에 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다.

## (2) 체재의 변화

《독립신문》은 주 3회(화·목·토) 격일간으로 발간되었다. 창간 당시에는 한글판 3면과 영문판 《The Independent》 1면을 한 신문에 같이 편집한 2국어신문이었다. 판형은 A4판으로 판면이 20cm×29cm 정도의 크기였고 본문은 4호 활자로 한글 전용이었다. 창간호부터 4월 18일자 제6호까지는 ‘독립신문’으로 표기하다가 제12호부터 ‘독립신문’으로 바꾸었다.

이듬해인 1897년 1월부터는 한글판과 영문판 《The Independent》를 분리하여 신문을 2종으로 만들었다. 이 때 한글판은 판형을 원래대로 두었으나 영문판은 24cm×37cm로 키웠다. 통상적으로 《독립신문》이라면 한글판과 영문판 2종의 신문을 일컫는다.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인 1898년 7월 1일부터는 일간으로 발행횟수를 늘렸다. 《독립신문》의 일간 제작은 당시 사회가 이를 요구하였다는 측

5) 《舊韓國外交文書》 3권, 日案 3(고려대 아시아문헌연구소, 1967), 402쪽.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6권, 〈外衙門日記〉 105・132쪽.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896년 〈機密本省往〉 280, 195~219쪽.

6) 慎鋪廈, 앞의 책, 40~45쪽.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해 4월 9일부터 배재학당의 학생회인 협성회가 일간으로 《미일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독립신문》이 창간 이래 격일간이었는데 그보다 뒤에 나온 《미일신문》이 일간으로 발행되자 이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일간으로 발행하면서 판형을 B5(판면은 17cm×23cm)로 줄였다가 1899년 9월 1일부터는 지폭을 B4판으로 다시 확장하여 창간 당시의 크기가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연도인 1899년에는 영문판의 발행이 부진하여 때로는 주간 단위로 발행되거나 또는 부정기적으로도 발행되어 전체 발행 호수가 14호에 그치고 말았다.<sup>7)</sup> 《독립신문》이 창간된 때로부터 폐간까지 43개월 동안 간행된 총 호수는 한글판 776호, 영문판이 442호였는데, 연도별 간행 호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독립신문》연도별 간행 내용

연 도	한글판	영문판	비 고
1896	116	116	B4판 : 한글판 3면, 영문판 1면
1897	154	154	한-영문판 분리 한-영 각 4면
1898	228	151	7월 1일 일간 : 판형은 A5판으로 축소
1899	278	21	9월부터 B4판으로 확대, 12월 4일 폐간
총호수	776	442	

《독립신문》은 평상시에 4쪽을 발행하였으나 때로는 부록을 발행하였으며, 영문판은 호외를 발행한 일도 있었다. 영문판의 호외는 1896년 11월 4일에 발행된 것으로 오하이오주지사였던 매킨리(William McKinley)소령이 미국 대통령(제25대)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간단한 내용이다.

### (3) 광 고

본격적인 신문광고는 《독립신문》에 처음으로 실리기 시작하였다. 창간 첫

7) 이광린, 앞의 글에 의하면 1899년에 영문판은 21호가 발행되었다 하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14호밖에 찾을 수 없다.

해의 지면 구성은 1면 머리에 논설을 싣고 2면에는 국내외의 기사, 3면에는 광고를 실었다. 창간호의 광고를 보면 영문과 국문이 한 신문에 붙어 있었으므로 광고도 영문과 국문광고가 같이 실렸는데, 주지회사(Tsuji & Co.)와 가메야회사(K. Kameya) 같은 경우는 영문과 국문으로 2종의 문안을 만들어 실렸다. 서적광고로는 영어 월간잡지 《코리안 리포지토리》와 헐버트가 번역한 《사민필지》, 언더우드의 《한영사전》과 《한영문법》이 있었고, 서양인들을 상대로 식품과 서양물품을 판매하는 광고도 있었다. 정동의 고살기(A. Gorshalki) 상회와 제물포의 J. Gaillard Jeune상회는 창간 당시부터 시작하여 오랫동안 《독립신문》에 고정광고를 낸 광고주였다.

《한성주보》에 처음으로 광고를 실었던 세창양행(Edward Mayer & Co.)은 《독립신문》에도 광고를 실었으며 그 후에 창간되는 여러 민간신문들과 일제 치하까지도 계속되었던 광고주였다. 《독립신문》에 광고를 실은 서양과 일본인 광고주들은 다양한 도안(Illustration)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초기 광고의 기법을 향상시켰다. 세창양행은 1897년 2월 18일자 《독립신문》에 실은 수마트라산 석유광고에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안을 사용하였다. 濟衆院도 도안을 활용한 광고를 실었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학질약 금계랍(키니네, Qinine)과 회충산에 태극기를 그려 넣었다. 세창양행도 태극기 도안을 사용하였다. 세창양행의 금계랍광고에는 장수의 상징인 학과 거북의 도안을 사용하였다. 영문광고와 국문광고가 같이 실린 1896년의 경우 국문광고는 영문광고를 해석하여 게재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외국 잡화상의 광고는 거의 국문과 영문의 두 가지로 게재되었다. 영문판의 광고주는 대부분이 잡화상 또는 무역상이었다.

《독립신문》광고 가운데 가장 큰 대형광고는 1899년 7월 12일자에 한 면 전체 광고면의 3분의 2를 차지한 양담배 ‘히어로(Hero)’ 광고였다. 놀라운 것은 이 날짜 광고에는 開利洋行의 자전거광고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수입한 자전거와 축음기(유성기)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실렸는데 자전거와 축음기는 오늘날의 자가용보다 훨씬 희귀한 신분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독립신문》은 1899년 12월 4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한글판에는 모두 4,693개의 광고가 실려 한 호 평균 7.2개 꼴이 게재되었다. 이 가운데 한글광

고는 3,817개였고 영문이 876개였다. 또한 영문판에는 모두 4,832개의 광고가 실려 호당 평균으로는 11개였다.<sup>8)</sup> 이는 《독립신문》이 광고매체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글판 《독립신문》에 광고를 많이 한 업종은 잡화상이 1위였고, 《사민필지》 등의 서적광고가 2위였으며, 《그리스도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의 광고도 꾸준히 실렸다. 露韓銀行 광고와 대한은행의 창업광고 같은 은행광고가 등장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임대주택광고와 외국의 옷감·양복 등의 수입의류광고도 게재되었다.

영문으로 된 傳單광고도 있었다. 1897년 6월 17일에는 칼리츠키회사(F. Kalitzky & Co.)에서 수입한 러시아산 식료품(훈제연어·소시지 등)과 잡화를 소개하는 전단광고가 신문에 삽입되어 있었고, 인천에 있는 세창양행이 운항하는 화륜선(증기선)의 전국 각 항구별 운임표도 부록으로 발행하였다. 호외와 전단광고는 모두 우리 나라 신문으로는 처음 발행한 것이다.

〈표 2〉

《독립신문》의 광고료

구 분	1 년	6 월	1 월	1주(6일)	1 회
1단(28행)	40원	24원	5원	1원 50전	50전
반단(14행)	20원	12원	3원	1원	30전
7 행	16원	10원	2원	75전	20전

#### (4) 《독립신문》의 역할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정부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으며 국민계몽을 위해 노력하여 이 같은 편집정신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한국언론의 전통으로 확립·계승되었다. 《독립신문》이후에 나타난 한말의 애국계몽적인 언론과 일제하의 항일언론투쟁, 그리고 광복 후 반독재 민주화를 지향하면서 이룩한 언론의 역할은 《독립신문》으로부터 비롯되어 오늘의 신문에까지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 10월부터 1888년 7월까지 정부기구인 박문국에

8) 김은용, <대한제국시대 신문광고에 대한 일 고찰>(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1989), 26~27쪽.

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했는데 《독립신문》은 그 내용과 운영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순보-주보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순보와 주보는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이므로 국민계몽과 지식 전달에 치중하였으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폐이겠다”고 선언하였다. 논설을 1면 머리에 실어서 정부와 집권 위정자들의 비정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였으며, 민간인의 잘못도 서슴없이 지적하였다.

둘째, 《독립신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관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임을 알려 주었다. 관존민비의 봉건적인 전제군주 치하에 억눌려 살던 국민들로서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셋째, 국민들은 이 신문에 실린 사실과 기사를 통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웠던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열강 여러 나라들이 국가의 이권을 탈취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도록 하였다.

넷째, 《독립신문》은 한글을 전용하고 띄어쓰기를 실시하여 누구나 읽기 쉽도록 만들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우리 글로 신문을 제작하여 한글을 일상적인 공용문자로 격상시켰다. 그 후에 창간되는 한말의 다른 민간 신문 가운데는 국한문 혼용 신문과 한글 전용 신문이 있었는데 한글 전용 신문은 《독립신문》의 선구적인 한글 전용을 뒤따른 것이다.

다섯째, 구독료를 싸게 하여 상하귀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897년 1월부터 한글판과 영문판을 분리하면서 한글판을 영문판보다 구독료를 싸게 책정하여 한국인들에게는 신문구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많은 사람이 읽도록 배려하였다. 1897년 1월부터의 구독료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한글판은 1부당 동전 2푼(2전), 월 25전, 연 2원 60전으로, 영문판은 1장당 동전 5푼(5전), 월 75전, 연 6원으로 차별을 두었다.

〈표 3〉 1897년 《독립신문》 한글판-영문판 구독료

	1 부	1개월	1 년
한글판	2푼(2전)	25전	2원 60전
영문판	5푼(5전)	75전	6원

여섯째, 신문이 광고매체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독립신문》은 실증하였다. 《한성주보》에는 몇 건의 광고가 등장하였으나 광고료를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순보와 주보가 구독료를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광고료를 신문의 수입원으로 삼지는 않았다. 《독립신문》의 광고 게재는 신문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광고료를 수입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서 독립적인 사업으로 신문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창간되는 민간신문에서 이와 같은 경영방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독립신문》이후에 여러 민간신문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정부의 보조가 없어도 구독료와 광고료만으로 신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일곱째, 영문판 《The Independent》는 당시의 한국사정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세계에 알리고 한국인의 의사와 주장을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 (5) 서재필의 추방

《독립신문》이 열강세력과 정부관리들을 비판하자 러시아와 친러 수구파들은 서재필의 추방을 획책하게 되었다. 외부대신 조병직은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직에서 해임한다고 1897년 12월 13일자로 미국공사 알렌에게 통고하였다. 조병직은 이튿날인 12월 14일에는 농상공부에 통보하여 서재필을 중추원 고문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독립신문》도 폐간시키라고 요청하였다. 서재필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였다.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러시아와 한국정부의 음모에 서재필은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는 《독립신문》의 논설을 통해서 정부와 러시아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자신은 거의 2년 동안 열과 성을 기울여 나라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정부의 박대를 받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 동안 나라를 위하여 바른 말한 것이 죄가 된다면 스스로 죄인으로 자처하겠으며, 신문도 앞으로 더 이상 발간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비추었다.<sup>9)</sup>

서재필은 정부에서 자신을 중추원 고문으로 위촉한 계약기한이 10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남은 8년간의 봉급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미국공사 알렌도 한국정부가 서재필의 중추원 고문직을 해임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하면서 서재필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의 봉급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재필이 한국에서 떠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재필을 대리한 알렌과 한국정부 사이의 교섭은 5개월이 지난 1898년 4월 26일에야 타결되었다. 정부는 서재필이 요구한 미불급료 전액과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여비 600원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서재필과 10년 기한으로 계약한 기간 가운데 남은 7년 10개월 분의 봉급은 28,200원이었고 여기에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갈 여비 600원을 더하면 28,800원이 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독립신문》을 창간할 당시 서재필에게 지급하였던 4,400원(창간 준비금 3,000원, 가옥구입 및 생계비 1,400원)을 공제한 24,400원을 지급하였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서재필의 도미를 만류하였으나 그는 1898년 5월 14일 용산에서 배를 타고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 (6) 윤치호와 아펜젤러의 경영

서재필은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에게 《독립신문》의 편집과 경영을 위임하였다.<sup>10)</sup> 그리고 尹致昊를 주필로 임명하여 경영 전반을 맡도록 하였다.

윤치호는 1881년 1월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동경에 갔다가 그 곳의 同

9) 《독립신문》, 1897년 12월 18일, 논설.

10) 이만열, 《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연세대 출판부, 1985), 393~395쪽, 1898년 8월 17일 아펜젤러가 서재필에게 보낸 편지.

人舍에 입학하여 영어와 일어를 배웠고, 그 후 중국 상해의 中西書院에서 5년간 공부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밴더빌트(Vanderbilt)와 에모리(Emory) 대학에 유학하고 온 지식인이었다. 그는 갑오경장·독립협회운동·애국계몽운동과 같은 개화기의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에 직접 간접으로 깊이 간여하였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학부협관·외부협관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1897년 후반부터는 독립협회에 적극 가담하여 그 회장을 맡는 등 정치의 중심무대에서 활약하였던 역사의 참여자이자 관찰자이기도 하였다.

윤치호는 경영을 맡은 지 한 달 반 후인 7월 1일부터 그 때까지 격일간으로 주 3회 발행이었던 《독립신문》을 일간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해 12월 25일 고종이 11개조의 민회 금압령을 내려 독립협회와 황국협회를 혁파하도록 명하자 독립협회 회장이었던 윤치호는 덕원(元山)감리 겸 부윤으로 임명되어 서울을 떠나면서 《독립신문》에서도 손을 떼고 말았다. 이리하여 1899년 1월부터 독립신문사는 아펜젤러가 맡아 운영하였다.

《독립신문》에는 서재필과 윤치호 외에도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있었다. 그 가운데는 독립협회의 소장 신진파로 활약하여 중추원 議官으로 선출되기까지 했던 孫承鏞이 있다. 한글학자 周時經(본명은 尙鏞)도 《독립신문》제작에 참여하면서 한글연구에 몰두하였다.

주시경은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였을 때에는 배재학당의 학생이면서 《독립신문》의 ‘회계사무 겸 校補’의 일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 후 회계의 일은 그만두고 ‘총무’가 되었다가 1898년 봄부터 9월까지의 ‘총무 겸 교보’의 일을 맡았다.<sup>11)</sup> 이 기간 동안 그는 독립신문사 안에 國文同式會를 두었다 하며, 《독립신문》에 2편의 〈국문론〉을 발표하였다. 1897년 4월 22일과 24일자, 그리고 이 해 9월 25일과 28일자 1면 논설란에 실린 글이 그것이다.

아펜젤러는 우리 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이며 교육자이자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인 사람이다. 그는 27세였던 1885년에 한국에 와서 이듬해 6월 배재학당의 전신인 영어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1887년에는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받아 서양식 교육을 처음으로

11) 金敏洙, 《周時經 研究》(탐출판사, 1977), 35쪽에 실린 주시경의 이력서와 《나라사랑》 4, 〈한헌샘 주시경선생 특집호〉(1971) 참조.

실시하였다.<sup>12)</sup> 1890년 1월에는 종로서점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6월 대한성 교서회 회장이 되었고, 1895년부터는 영문 월간지 《코리안 리포지토리》의 편집인도 맡았다.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독립신문》의 사장은 아펜젤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윤치호가 운영하다가 1899년 1월 윤치호가 덕원감리로 떠난 뒤부터는 아펜젤러가 신문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해 6월 1일부터는 영국인 엠버얼리(H. Emberley)에게 신문사를 인계하였다.

엠버얼리는 1898년 6월부터 삼문출판사의 인쇄시설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신문을 운영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 밖에 영문판 제작에는 호머 헐버트(Homer H. Hulbert)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의 동생인 아처 헐버트(Archer B. Hulbert)도 1897년에서 1898년 사이에는 영문판 제작을 도왔다.<sup>13)</sup>

그런데 정부는 1899년 7월 14일 《독립신문》 사옥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 서재필에게 신문사의 사옥으로 사용하도록 정부 소유의 건물을 제공하였는데 이를 환수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서재필은 사옥의 반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한미국공사 알렌이 정부와 미국에 있는 서재필 사이의 교섭을 주선하였다. 이리하여 1899년 12월 4일자로 정부가 서재필에게 4,000원을 지급하여 《독립신문》의 판권과 인쇄시설을 매수하였다. 이 날부터 《독립신문》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독립신문사를 매수한 뒤에 대한제국정부는 그 시설로 신문 발간을 계속하기 위해 아일랜드 출신 영국인 오셰아(吾時, John O'Shea)에게 일을 맡겼다. 궁내부는 정간중이었던 《商務總報》의 기계와 활자까지 오셰아에게 인계하였으나, 결국 신문은 나오지 못하고 말았다. 오셰아는 재동에 있던 외아문 건물에 거주하면서 영문판만 주 2회씩 발간하겠다고면서 영어에 능통한 내외국인을 모집한다고도 했지만 신문은 발행되지 못하였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되어 1899년 12월 4일에 폐간되었으므로 43개월간 간행된 셈이다. 이 신문이 언론의 발달과 사회의 개혁에 미친 영향은 컸다.

12) 이만열, 앞의 책, 511쪽 이하 年譜 참조.

13) C. N. Weems,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 1, London ; Loutledge & Kegan Paul, 1961, p. ED 34.



### 3) 외국인의 신문 발행과 잡지

#### (1) 일본인 발행의 신문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동양 3국은 수세기 전부터 전근대적 서한신문 또는 필사신문으로 불리는 신문 유사물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朝報》, 일본의 《요미우리(讀賣)》 또는 《카와라반(瓦板)》, 그리고 중국의 《朝報》·《京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 유사물이 근대적인 형태의 신문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근대적인 신문이 생성 발달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은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 중국과 일본언론사는 대체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신문의 초기 단계인 한성순보와 주보의 발간에는 서양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신문을 참고로 하였다. 순보 창간에 앞서 일본인들은 부산에서 일본어로 된 신문과 잡지를 먼저 발행하였다. 일본거류민 釜山商法會議所에서 1881년 12월 10일부터 일본어와 한문으로 《朝鮮新報》라는 순간 신문을 발행하였고, 1892년 9월부터는 부산에서 《鷄林》이라는 잡지도 발행하였다.

일인들은 그 후 인천에서 《仁川京城隔週商報》(1890년 1월 28일)를 창간하여 제호를 《朝鮮旬報》(1891년 9월 1일), 《朝鮮新報》(1892년 4월 15일)로 바꾸면서 발간을 계속하였고, 서울에서는 1895년 2월 15일부터 한국어와 일어로 된 격일간 《漢城新報》를 창간하였다.

《한성신보》는 우리말로 발행된 신문 가운데는 처음으로 오사카(大版) 스탠더드 사이즈로 인쇄하면서 4호와 2호 활자를 섞어 쓰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 신문도 당시 다른 인쇄물과 마찬가지로 본문은 4호 활자였지만 강조할 부분에는 2호 활자를 병용하였다. 이러한 제작방법은 아직 우리 나라의 다른 출판물은 채용하지 못했던 기술이었다. 순수한 인쇄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제작기술은 우리의 신문 인쇄기술 향상에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한국어 신문은 1904년부터 여러 개로 늘었다.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한국침략의 수단으로 신문을 활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일인들이 발간한 신문은 반민족적인 내용이었지만, 인쇄의 발달과 신문 편집기술의 향상을 촉진한 측면이 있었다. 신문의 색도인쇄, 소설연재 등은 일본인 발행 신문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 (2) 기독교계통의 종교신문

1990년대로 넘어와서 민간신문이 창간될 무렵에는 기독교에서도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는 선교의 방편으로 대개 세 가지 사업을 병행하였는데 그것은 교육사업, 의료사업, 그리고 출판사업이었다. 출판사업은 다시 세 부류의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하였는데, ①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 ② 한국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것, 그리고 ③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의 교회를 상대로 하는 3가지 종류였다.

①에 속하는 신문은 감리교의 《조선크리스도인회보》(1897년 2월 2일), 장로교의 《그리스도신문》(1897년 4월 1일)이다. 천주교의 프랑스신부 드망즈(Florian Demange, 安世華)가 발행하던 《京郷新聞》(1906. 10. 19)도 이에 속한다.

②의 부류로는 감리교회의 《코리안 리포지토리》(《The Korean Repository》)가 있고, ③은 영국 성공회의 《모닝 칼》(《The Morning Calm》)이 있다. 《모닝 칼》은 우리 나라와 관련되어 외국인이 발행한 최초의 잡지였다. 1890년 7월에 창간되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런던에서 인쇄되어 우리 나라와 영국 등지에서 배포하였다. 제작방법은 서울에서 만든 원고를 런던으로 보내면 런던에서 인쇄 발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행된 잡지로 볼 수는 없다.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하였으므로 선교사들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출판사업과 함께 한국어 문법서 또는 사전을 펴내게 되었다. 이들은 한국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교를 위해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성서를 한글로 출판하였다. 이들 기독교 출판물은 한글보급에 공헌하게 되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거의 비슷한 때에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출판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감리교는 1897년 2월 2일 한글 전용의 주간신문 《조선

크리스도인회보》(《The Christian Advocate》)를 창간하였다. 발행인은 아펜젤러였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는 1897년 12월 8일부터는 《대한크리스도인회보》로 개제하였는데, 1900년의 경우 서울에 340부를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 810여 부가 배포되었다.

장로교에서는 1897년 4월 1일부터 《그리스도신문》(《The Christian News》)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발행인은 언더우드(H. G. Underwood)였다. 《대한크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은 이후 8년 동안 발행되다가 1905년에 이르러 두 교파 신문의 통합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여 그 해 6월 24일에 각각 폐간호를 내고 7월 1일부터 《그리스도신문》이라는 주간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처음으로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신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장은 캐나다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게일(J. S. Gale)이었으며 장·감 양 교회에서 운영 및 편집에 참여하였다. 이 신문은 1907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수교신보》(《The Church Herald》)로 이름을 바꾸어 격주간으로 나오다가 한일합병이 되던 해인 1910년 2월 21일에 폐간되었다.

이리하여 한동안 초교파적인 신문을 발행하던 양 교파는 다시 두 신문으로 따로 발행하게 되었다. 장로교는 《예수교회보》(《The Christian News》, 1910년 2월 24일 창간)를, 감리교는 《그리스도회보》(《The Korean Christian Advocate》, 1911년 1월 31일 창간)를 각각 발행하였다. 양 교파가 또 다시 연합신문을 발행한 것은 1915년의 《기독신보》였다. 한편 천주교회에서는 1906년 10월 19일 주간으로 《경향신문》을 창간하였다. 발행인은 프랑스 신부 安世華(Florian Demange)였다.

한말 외국인들이 발행한 신문·잡지·출판물들의 한국언론 발달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선교사들과 일인들이 만주·상해·요코하마 등지에서 한글활자를 만들고 서양식 인쇄시설을 들여 왔다. 그러므로 인쇄문화의 발달은 이들 나라와의 관련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삼문출판사와 일인 경영의 신문들은 한국의 신문발달 초기에는 기술전수 또는 기술인력을 공급하였을 것이다. 셋째, 이들 출판사는 한국의 신문·잡지 창간을 자극했고 도움을 주었다. 《독립신문》과 《대한민일신보》는 한글과 영문 2개 국어로

편집되었는데, 이 두 신문이 다 같이 3개월 정도의 짧은 준비기간 밖에 갖지 못했으면서도 영문판까지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서양인들이 경영하고 있던 출판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넷째, 특히 서양 선교사들의 한글출판물은 《독립신문》·《미일신문》·《대국신문》 등 한국 초기 신문의 한글 전용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다.

### (3) 잡지의 시초

우리 나라 최초의 잡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주장이 다르다. 1892년 1월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올링거(F. Ohlinger)부처가 창간한 《코리안 리포지토리》를 최초의 잡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896년 2월에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발행한 《친목회회보》가 잡지의 효시라는 견해도 있고, 1896년 11월의 《대조선독립협회회보》가 최초라는 사람도 있다.

한말에 발행된 잡지는 ① 교회계열에서 발간한 것, ② 유학생들이 발행한 것, ③ 단체 또는 학회를 중심으로 발행된 것, ④ 개화계몽을 위주로 한 잡지류의 4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시에 잡지를 발행한 사람들은 직업적인 잡지인이 아니라 교회계통이나 유학생회, 또는 여러 애국계몽단체의 책임자나 잡지 발행담당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계몽운동에 뜻을 둔 소수의 잡지발행인들도 있었다.

《코리안 리포지토리》는 서양선교사들이 영어로 발행하였지만 우리 나라 언론발달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잡지였다. 이 잡지는 올링거부처가 1892년에 창간하여 1년 동안 발행하다가 중단했는데 2년 후인 1895년 1월에는 아펜젤러와 존스(George Herbert Jones)가 발행인이 되어 속간하면서 헐버트가 부편집인으로 실무를 맡았다. 이 잡지는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사정을 알리자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한국의 역사·문화, 당시의 정세 등에 관한 내용을 취급하였다. 1898년 12월까지의 월간이었으나 1899년부터는 4면 또는 8면의 조그만 주간 뉴스 블레틴 형태로 6월까지 발행되었다. 《코리안 리포지토리》는 영어로 발행된 잡지였지만 당시 우리 나라의 사정을 연구하는 데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친목회회보》는 일본유학생들이 동경에서 발행한 잡지였다. 1895년 2월

에 창간되어 1898년 4월까지 6호를 발행하였는데 편집 겸 발행인은 崔相敦이었다. 최상돈은 우리 나라에서 잡지편집 겸 발행인으로 최초의 인물인 셈이다.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독립협회의 기관지였다.

민간출판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출판사업을 벌인 사람은 崔南善과 그의 형인 崔昌善이었다. 이들 형제는 1908년에 新文館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1920년대까지 활발한 출판사업을 벌여 대표적인 잡지인이자 출판인이 되었다. 최남선은 우리 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종합잡지로 치는 《소년》(1908년 11월)에서 《붉은저고리》(1913년 : 월 2회간 신문) · 《새별》(1913년 4월) · 《아이들보이》(1913년 9월) · 《청춘》(1914년 10월) 등의 잡지를 발행했고 3·1운동 후인 1922년 9월부터는 시사주간지 《東明》을 발행하다가 1924년 3월에는 일간지 《시대일보》를 발간하였다.

#### 4) 일간지 《미일신문》

##### (1) 배재학당의 《협성회회보》

1898년은 언론사에서 그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적인 해를 그은 해였다. 이 해에는 《협성회회보》-《미일신문》의 창간에 이어 한말 대표적인 민족지 《대국신문》과 《皇城新聞》이 창간되어 《독립신문》·《한성신보》 그리고 종교계통의 신문을 합쳐서 우리 나라에도 ‘언론계’가 완전히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해에는 또한 우리 나라 최초의 언론단체인 ‘신문사 친목회’가 결성되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경영문제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언론인의 친목도 도모하게 되었다.

민간신문의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여건이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민간신문의 발간을 촉진하였다. 개화사상이 확산되었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사회개혁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보의 욕구가 상승되었으며 동시에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신문을 발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두 번째 여건으로는 사회 지도계층간에 신문도 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독립신문》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창간되었으나 구독료와 광고료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독립신문》보다 한 해 먼저 일인들이 발행하기 시작했던 《한성신보》와 미국 감리교와 장로교가 1897년부터 각각 발행하기 시작한 《대한크리스도인회보》와 《그리스도신문》도 민간신문의 발행을 자극하였다.

《협성회회보》·《미일신문》은 1년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밖에 발간되지 못했으나 초기 한국신문사에 찬연한 빛을 남긴 신문이다. 《협성회회보》를 발간한 협성회는 1896년 11월 30일에 결성된 배재학당 학생회였다. 협성회는 서재필의 지도로 결성되어 서양식 회의 운영방식에 따라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그 목적을 “충군애국지심을 굳게 세워 의기와 용맹을 기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4)</sup>

우리 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이 시작된 배재학당에서 서양의 민주적 회의 진행방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어떤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전개한다는 것은 학교내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었다. 더구나 회원을 학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찬성원’제를 두어 관리와 시민 등 뜻있는 젊은이에게는 문호를 개방하여 협성회는 하나의 사회단체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협성회의 가장 큰 업적은 《협성회회보》의 창간이었다.

《협성회회보》를 발간하기에 앞서서 협성회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신문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우리 회중에서 일주일간 회보를 발간함이 가흠’(제29회 토론), ‘신문국을 각처에 배설하여 인민의 이목을 열님이 가흠’(제33회 토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 끝에 1898년 1월 1일 《협성회회보》를 창간하였다.

이 때까지 민간지로는 《독립신문》밖에 없었고, 일인들이 발간하고 있던 《한성신보》(국한문·일문지)와 아펜젤러가 발행하는 주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와 언더우드의 《그리스도신문》이 있었다.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서재필은 미국

14) 《협성회회보》 1호, 1898년 1월 1일, 론설.

인 신분이었으므로 엄격히 따지면 《독립신문》도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협성회회보》는 외부의 지원 없이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발간하는 신문이었다. 《협성회회보》는 협성회의 기관지였으나 편집체제와 내용은 완전히 일반 종합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협성회회보》는 발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 번 발간하기에 십여원씩 댈지언정 이 회보를 발간하는 것은 전국 동포의 이목을 여러 내외국 형편이 엇더케 될 줄을 대강 알게 하고 우리 이천만 동포가 일심합력하여 우호로 남군과 나라를 맞들고 아래로 우리 동포의 집안들을 보호하여 가자고 반론하여 시작한 것이러니...

《협성회회보》는 《독립신문》과 똑같은 체제를 답습하였다. 4·6배판 2단제로서 1면에는 〈론설〉을 싣고, 2면·3면에 〈내보〉와 〈외보〉, 그리고 맨 마지막인 4면 끝에 협성회의 소식인 〈회중잡보〉를 실었다. 이 〈회중잡보〉도 당시 협성회의 사회적인 위치로 보아서 일반에게 뉴스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특이한 것으로는 제4호(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최병현·신용진(6호)·이익진(7호)·오공선(11호)·이승만(12호)·홍정원(13호)·김만식(14호) 등의 기명 논설을 게재한 일이다.

《협성회회보》는 치외법권적인 위치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외국인들을 비난하고, 내정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을 가하였다. 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인천신보에 말하였시되 양인 차례라 혼란놈이 요리집에서 술을 먹다가 우리나라 사람 수십명이 구경한 것을 총으로 노으매 그중에 한 사람이 마저 탄알이 뼈를 들고 배로 드러가 거의 죽게 되었다 하니 그러케 악한 오랑캐놈을 당장에 설분 못 하였스니 듯한 자의게 분한 일이나 장차 정부에서 법률대로 조치할 일일너라(《협성회회보》 4호, 1898년 1월 22일, 〈내보〉).

인천에서 서양인이 술 마시는 모습을 한국인들이 몰려가 구경하는데 이를 귀찮게 여긴 서양인이 권총을 쏘아 구경꾼의 배를 관통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사실 보도와 함께 기자의 주관적 첨가된 논평기사의 성격을 동시

에 지니고 있다. 그와 같이 악한 ‘오랑캐놈’에게 그 자리에서 분풀이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협성회회보》는 회원들에게는 물론이고 일반을 상대로 판매와 배달도 하여 일반 대중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넓혔다. 이리하여 처음 협성회를 창립할 당시에는 불과 10여 명의 발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협성회회보》가 창간될 무렵에는 회원이 2백여 명으로 늘어났고, 신문을 발간한 후에는 일반에도 큰 호응을 받아 오래지 않아 근 3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제5호(1월 30일자)부터는 1898년(광무 2년) 1월 26일에 농상공부의 정식인가를 받았음을 제호 아래에 밝히고 있으며, 이 신문이 학교 내·외의 큰 호응을 받자 협성회는 4월 2일자로 발간한 제14호를 마지막으로 주간 발행을 중단하고, 15호째 발간일자인 4월 9일부터는 우리 나라 첫 일간지인 《미일신문》을 창간하였다. 《협성회회보》는 과격한 정부비판의 논조로 말미암아 고종의 內命으로 폐간되었다고도 알려져 왔으나, 이는 강제 폐간이 아니라 일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호를 바꾸었던 것이다.

## (2) 일간신문으로 발전

협성회가 《협성회회보》를 일간으로 고쳐 《미일신문》을 창간한 것은 혁신적인 패사였다. 당시는 아직 《독립신문》조차 격일간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으므로 《미일신문》은 우리 나라 신문사상 최초의 일간신문이라는 영예를 얻게 된 것이다.

《협성회회보》와 《미일신문》을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협성회의 간부들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작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협성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었으므로 배재학당 학생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특별히 신문제작을 담당한 ‘記載員’, 즉 기자가 따로 필요했을 것이다.

《협성회회보》에 기명 논설을 썼던 사람들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梁弘默·李承晩·崔延植·柳永錫 등이었다.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건국 당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이승만은 배재학당 학생으로 이 신문제작에 참여하였는데 사장직



을 맡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협성회회보》를 발전시켜 《미일신문》을 발행하던 때에는 협성회의 회장이 되어 《미일신문》의 사장으로 되었으나 사내 분규로 말미암아 유영석·최정식과 함께 7월 초에 물러나 8월 10일에 창간되는 《태국신문》에 참여하였다.

《협성회회보》 2월 19일자(제8호) 〈회중잡보〉에는 협성회 제5차 임원의 명단과 함께 “회보장 양홍묵씨는 인임하였더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양홍묵은 이 신문이 창간될 때에 ‘회보장’으로서 신문제작을 책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홍묵은 그 후 《미일신문》을 창간한 후에는 사장이 되어 이 신문을 이끌어 나갔고, 이 해 가을부터 1902년까지 배재학당의 선생으로 재직하였다. 또한 그는 이승만과 함께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서도 크게 활약하여 중추원 의관으로 선출되었으며, 후에 의정부 참서관, 김해군수 등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협성회회보》가 《미일신문》으로 발전한 후에는 협성회와는 별도의 신문사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내 경영문제와 관련한 사내 분규가 일어나 제작진의 변동이 있었다. 《미일신문》이 창간된 3일 후인 4월 12일자(제3호)에는 “이 신문 사장은 본회 회장이 예겸할줄노 작당되었더라” 하여 협성회 회장이 《미일신문》의 ‘사장’을 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40일 후인 5월 21일자(제37호)에 의하면 협성회 임원을 개선하여 회장에 이승만, 부회장으로는 양홍묵이 선출되었는데, 같은 날짜 4면에는 ‘편집인 최정식, 저술인 리승만, 발행겸 인쇄인 류영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편집인 최정식은 협성회의 정회원이 아니고 찬성원이었는데(《협성회회보》 2월 26일자 〈회중잡보〉) 곧 사내 분규의 장본인으로 몰려 신문사를 떠나게 되고, 얼마 후에는 설화사건으로 구속되어 그보다 뒤에 구속된 이승만과 탈옥을 기도하다 사형당하였다.

### (3) 기사의 외교문제화

《미일신문》은 외세에 저항하는 한국신문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자유와 개화를 열렬히 주장한 《미일신문》의 논조는 외세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가장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은 5월 16일자(제32호)

1면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이권을 요구한 외교문서를 폭로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폭로한 내용은 러시아가 목포와 진남포의 조계지를 근방 4방으로 10리를 사겠다고 요구한 것과, 프랑스는 평양의 석탄광 하나를 채굴하여 경의선 철도부설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이미 1896년 6월에 경의선 철도부설권을 얻어 가지고 있었다. 《미일신문》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이권요구를 폭로한 같은 날짜에 일인들이 발행하던 《한성신보》도 동일한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미일신문》과 속셈은 달랐지만 일본측으로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신문의 기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독립협회는 외부에 대해 사실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 질의서를 외부대신에게 보내면서 본국의 땅은 선왕의 강토요 인민의 생업하는 땅인데 귀 대신의 고명하신 식견으로 마땅히 참작하여 판단하실 터이오나 본회에서 이 일에 대하여 부득불 참여해야겠다고 선언하였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요구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은밀히 일을 성취하려 했던 두 나라 공사관에서는 즉시 외부에 항의문을 보내왔다.

러시아공사 마튜닌(Nikolai Matyunin)은 문제된 《미일신문》과 《한성신보》를 첨부하여 한국정부에 보내면서 외교기밀이 누설된 경위를 추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으며, 프랑스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도 항의와 함께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공사는 문제가 된 《미일신문》 5월 16일자 기사만이 아니라 5월 7일자와 11일자 기사에도 고의로 러시아군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으며, 교섭중인 외교기밀을 신문이 누설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항의한 것이다. 프랑스측도 외교기밀의 누설을 항의하였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항의는 5월 16일에 시작되어 6월 20일까지 계속되었다.

열강세력과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미일신문》은 굽히지 않았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항의가 한창이었던 5월 19일자 논설은 “어떤 사람은 저희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몇 만리 타국에 와서 체면 불구하고 남의 토지를

언어다가 저희 국기 밑에 속한 배 되게 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국은을 입어 벼슬을 하면서 인심 좋게 남의 청을 잘 들어 말로라도 허락을 하려 하였는지, 사람의 경계와 의리는 다 마치 한가지언마는 이 같이 등분이 있다”고 개탄하면서, 국가와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한국 대신들도 공격하였다.

한편 협성회는 5월 23일과 25일 특별회를 열고 프랑스공사가 《미일신문》 기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규탄하였다. 협성회는 양홍묵 등 5명을 총대위원으로 뽑아 만일 《미일신문》 기재원이 현저한 죄과가 있다면 依律懲治하고, 죄과가 없으면 죄 없는 이유를 프랑스공사에게 밝혀 양국 교제상 체면에 서로 손상됨이 없게 하라는 편지를 외부대신 조병식에게 보냈다. 열강의 언론에 대한 통제 요구는 집요해서 이 해 10월 7일에는 주한일본공사 카토(加藤增雄)까지 가세하여 주한외교사절단의 대표 자격으로 신문의 외교문서 게재를 금지시키라고 강요하였다.<sup>15)</sup>

열강 공사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한 외부는 마침내 신문을 규제할 법률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외부가 한성부에 법률제정을 의뢰해 보았으나 한성부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외부가 직접 이를 제정하기로 작정하였는데, 바로 이 무렵인 1898년 10월 30일 고종이 내린 5개 항의 詔勅 가운데 내부와 농상공부가 각국의 예를 본떠 신문조례를 제정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므로 내부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이리하여 내부는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하여 1899년 1월 전문 33조로 된 〈신문조례〉를 만들었으나 신문에 대해 가혹한 규제조항이 너무 많다는 언론계의 반발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최초의 〈신문지법〉은 이보다 8년 뒤인 1907년에 제정되었다.

#### (4) 《상무총보》 발간

《미일신문》은 1899년 4월 4일에 폐간되었다. 겨우 1년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밖에 발행되지 못한 것이다. 《미일신문》은 당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언론 발달에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1898년 말에 독립협회가 혁파

15) 《舊韓國外交文書》4, 日案 4, 149~150쪽.

되고 혁신세력이 꺾이면서 이 신문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폐간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난과 내분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미일신문》의 내분으로 이 신문을 뛰쳐나온 이승만·유영석 등은 《일일신문》을 발간하다가 8월 10일부터는 李鍾一이 창간한 《태국신문》에 합류하였다. 이 신문은 우리 나라 최초의 일간지로서 혁신세력을 대변하여 언론 발달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첫째 최초의 일간지로서 다른 신문에 자극을 주어 일간신문시대의 문을 열었고, 둘째 《일일신문》·《태국신문》·《상무총보》(후에 《대한상무신보》) 등의 창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셋째 민간신문의 외세에 대한 저항적 전통수립에 이바지하였다. 《독립신문》이 기초를 잡은 한국신문의 특성은 《미일신문》이 발간됨으로써 확고한 전통으로 계승·발전된 것이다. 이 신문은 러시아와 프랑스, 일본 등 당시 한반도에서의 이권침략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열강세력에 저항하였으나, 미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이는 이 신문이 미국인의 운영하에 있던 배재학당 학생들이 제작한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경영면에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신문 경영에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외부의 보조 없이 자력으로 시작한 최초의 신문이었으며, 당시 사회적 여건상 일간신문이 경영면에서 자립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빨랐고, 신문 발간의 사회적 후원세력이 와해된 정치상황의 변화 등이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정반대 입장에 있었던 보부상 쪽으로 팔려, 《商務總報》로 개제되었다.

폐간한 《미일신문》의 인쇄시설은 상무회사에서 인수하여 《상무총보》라는 신문을 창간하였다. 《상무총보》는 남아 있는 지면이 한 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신문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상무회사에서는 《미일신문》을 인수하여 사장에 길영수, 총무원을 나유석으로 하여 신문 발간을 준비하였다. 길영수는 바로 황국협회 보부상 패의 선봉장으로 독립협회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실린 1889년 4월 10일자 광고에는 《상무총보》가 4월 12일에 창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창간호는 4월 14일

(음력 3월 5일)자로 나왔다. 이 신문 역시 《미일신문》처럼 한글 전용이었으나 제목은 한자를 섞어 썼다. 내용은 ‘상무발달’과 상도확립 등 경제·상업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이었다.

《상무총보》는 주로 보부상조직을 통하여 보급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예상대로 판매되지 않아 《시사총보》에 광고까지 하는 등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시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더구나 겨우 2주일밖에 발행되지 않았던 4월 말에는 급료문제로 사원들이 일제히 퇴사하는 사태까지 생겼다.

이 신문은 처음에는 농상공부의 인가도 없이 발간되었던지 각 지방에 보내는 우편발송에도 문제가 있었고, 5월 하순에는 마침내 휴간에 들어갔다가, 길영수가 7월에 상공국장이 되면서 사옥을 법부 뒤 전 검률청으로 옮겨 속간하려 했으나 제대로 발간되지 못하였다. 9월에는 제호를 《대한상무신보》로 개제하여 국한문 혼용 신문으로 9월 6일부터 속간했으나, 어떤 일인지 상무회사에서도 보급에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 신문은 황국협회 계열로 경영이 넘어간 후에는 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다.

## 5) 새로운 신문들

### (1) 《경성신문》·《대한황성신문》

《京城新聞》은 1898년 3월 2일에 창간되어 같은 해 9월 5일에 《황성신문》이 되는 신문이다. 《경성신문》의 사장은 윤치호, 사무원은 鄭海源이었다. 이 두 사람의 명의로 농상공부에 제출한 신문발행 청원서에 의하면 《경성신문》은 매주 수·토요일 2회 발행하며 “각도 각군에 송출하여 各項商民의 이익을 助코저” 한다는 것으로, 상업흥왕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성신문》은 상업의 부흥을 위한 신문을 지향했던 것이다. 창간 직후 3월 5일자 《협성회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경성신문이 본월 이일에 처음으로 났는데 이 신문은 우리 나라 사람이 주장하여 순국문으로 인출하느니 각종물가를 尙尙히 低지하엿스니 상무상에 民우 요긴하더라(《협성회보》, 1898년 3월 5일, <너보>).

《경성신문》은 典洞 윤치호의 집에서 판매하였고<sup>16)</sup> 편집사무실도 사장 윤치호의 집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신문의 발행허가는 윤치호의 명의로 얻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그의 4촌 동생 尹致昭가 맡았었다는 데,<sup>17)</sup> 윤치호는 이해 5월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부터는 독립신문의 주필을 맡아 그 일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경성신문》에는 많이 간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경성신문》은 4월 6일(제11호)부터 제호를 《대한황성신문》으로 바꾸고 柳瑾이 주필을 맡았다. 이 때는 《협성회회보》가 주간에서 일간 《미일신문》으로 개제하기 이틀 전이었다. 제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개제 첫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가 농공상부 허가를 얻어 신문사를 설치하고 일흠을 경성신문이라 하였더니 이제는 대한황성신문이라 다시 곳치기는 우리 나라 자주독립한 후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나라 사람도 신문하는 줄을 알게 함이라

《대한황성신문》으로 개제한 것은 자주독립국인 대한에서 신문을 발간하고 있음을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호가 명시된 《대한황성신문》의 제호가 《경성신문》보다 더 적절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제호만 바뀌었을 뿐 운영자나 편집자는 변화가 없었다.

《대한황성신문》은 장차 일간으로 발행되는 《황성신문》의 기틀을 잡아 나갔다. 새로운 모금방식으로 股金制 합자회사로 운영하였는데<sup>18)</sup>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서 5월부터 股票 5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였다. 1股의 가격은 10원씩이었다.<sup>19)</sup> 이와 함께 신문사의 규칙을 제정하였고,<sup>20)</sup> 9월 5일에 《황

16) 《협성회회보》, 1898년 3월 5일 이후 26일자까지 4회에 걸친 광고.

17) 霞汀, 〈조선신문발달사〉(《新東亞》, 1934년 5월호), 54쪽.

車相瓚, 〈조선신문발달사〉(《朝光》, 1936년 11월호), 44쪽.

18) 《미일신문》, 5월 12일 〈잡보〉에 “자본전은 여러히 회사를 모하 각기 고분금을 뉘터인더 혼목에 십원식이니...” 그리고 《독립신문》 7월 15일자 〈광고〉에서는 “본사 고분표 가지신이는 전 우순청으로 오시오”라는 표현이 있어 《대한황성신문》이 股金制를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1898년 7월 16일에 열렸던 사원총회에서 제정한 〈皇城新聞社規則〉 제6조에 ‘本社는 各社員에게 出資券을 交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9) 《미일신문》, 1898년 5월 12일 잡보.

20) 《독립신문》, 1898년 7월 15일, 광고에는 “황성신문사의 규칙을 의당하고 립원

성신문》으로 발전한 뒤에는 주주총회인 사원총회에서 사장을 선출하였다. 초대 南宮櫛과 제2대 사장 張志淵도 사원총회에서 선출된 사장들이다. 이 신문에는 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 지역을 망라한 인물들이 참여하였고, 자본금도 특정인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지들이 공동 출자하여 민족지의 면모를 갖추었다.

## (2) 필화사건

《대한황성신문》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신문사가 피소당한 최초의 사건을 겪었다. 7월에 경기도 과천군청에 소속된 관리 金聲杓가 군수 吉泳洙의 비위사실을 투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길영수는 이를 사실무근이라 하여 한성재판소에 《대한황성신문》을 고소하고 공판일에는 과천주민 수백 명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재판소 앞에 집합시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대한황성측에서는 주필 유근이 재판정에 출두했는데 원고 길영수의 요구로 유근은 투서한 사람의 이름이 ‘김성표’임을 밝히고 말았다. 그 후 길영수는 투서한 김성표를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으나 《대한황성신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sup>21)</sup> 길영수는 이듬해 4월에는 《미일신문》을 인수하여 《상무총보》로 개제하고 사장에 취임한 사람이다.

《대한황성신문》은 일본에서 수입한 인쇄기계를 설치하고 사무를 확장하기 위하여 8월부터 휴간에 들어갔다가 9월 5일부터는 《황성신문》으로 개제하여 일간지로 발전하였다.

1899년 1월 22일에는 격일간 《時事叢報》가 창간되었다. 발행인 겸 사주는 洪中燮이었고, 주필은 장지연이었다. 국한문 혼용으로 발행된 이 신문의 수명은 길지 못해서 이 해 8월 17일까지 100호를 낸 뒤에 폐간하였다.

1896년 《독립신문》이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창간된 이래 2년 뒤인 1898년에는 《미일신문》·《대국신문》·《황성신문》이 나왔고, 그 한 해 뒤

도 선덜하라고...”라는 말이 있다.

21) 《檢事局起案》(서울대 규장각도서) 31호, 광무 2년 8월.

《皇城新聞》, 1898. 9. 7, 잡보 〈人孰無過〉.

에는 다시 《시사총보》와 《상무총보》가 발간되는 등으로 일시에 여러 신문이 다투어 나타나 활기를 띠는 듯하였으나 《독립신문》·《미일신문》·《시사총보》 그리고 《상무총보》는 1899년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가운데서 황성과 데국 두 신문은 한말 대표적인 민간신문으로 1910년까지 발행되었다. 특히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제작되었고 《데국신문》은 한글 전용을 고수하여 뚜렷한 특색을 나타내면서 발행되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대한미일신보》와 함께 항일적인 논조로 발간된다.

〈鄭晉錫〉

### 3. 언론의 구국투쟁

#### 1) 한말 언론과 계몽운동

1905년(광무 9) 11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교육과 실업의 발전이라는 실력양성을 내세운 계몽운동과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한 의병항쟁이 그것이었다. 대체로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졌지만, 이미 1904년 2월에 발발한 러일전쟁 이후부터 그 같은 움직임이 찾아진다고 하겠다. 특히 1904년 6·7월에 있는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로 일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권침탈에 있음을 인식한 지식인들에 의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계몽운동은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신교육운동·단체-학회운동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언론투쟁이었다. 이미 1890년대 후반기부터 국내에서는 민간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와 열강을 상대로 언론활동을 전개해 왔다. 1898년 12월 獨立協會가 해산되고 황제의 칙령으로 민간단체의 결성이 금지된 이후, 국민계몽과 여론형성에 있어 신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신문의 논조는 러일전쟁 이



전까지 문명개화를 기치로 하였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점차 국권회복이 주된 주제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신문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발간 주체에 따라서는 종교의 포교를 우선으로 한 경우도 있었으며, 오히려 친일적인 색채가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점은 을사조약의 강제체결 이후 나타나는 민간단체의 기관잡지나 개별잡지, 그리고 출판물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물론 한말 전 시기에 걸쳐 이들 언론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계몽을 통한 국권회복이었지만, 그 발간 주체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그러하였다. 개항 이래 자주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근대화와의 관심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립이라는 명제보다도 오히려 근대화의 논리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제의 국권침탈이 두드러지던 1900년대 후반기의 국권회복을 전제로 한 언론투쟁은 몇몇 민족언론을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잡지와 출판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지만, 두드러진 언론투쟁은 신문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19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에서 발행되던 신문의 언론활동을 통하여 국권회복운동의 양상을 살피고, 아울러 일제의 언론탄압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국내신문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던 1900년대 중반에 한국인이 발행한 신문은 10종 안팎이었다. 그 가운데 1909년 10월에 靑州에서 창간된 《靑南日報》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에서 발간된 중앙지였다. 그리고 몇몇 신문은 발간기간이 겨우 1년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이거나 구미인이 발행인이 되어 낸 신문도 적지 않았지만, 일본인 발행신문은 일제의 식민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미인이 발행한 신문도 《大韓每日申報》나 《京鄉新聞》을 제외하면 종교적인 목적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간행되고 있던 신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는 일본인 발행신문과, 개신교에서 발간한 순수한 종교신문, 예컨대 《그리스도신문》이나 《예수회회보》는 제외되었다.

〈표 1〉 한말 국내신문 발행현황(1904~1910)

순서	제 호	창 간 연 월 일	종 간 연 월 일	지령(발 행기간)	창 간 대 표	문 자	비 고
1	帝國新聞	1898. 8.10	1910. 3.31	3,240호	李鍾一	국 문	崔岡・鄭雲復사장
2	皇城新聞	1898. 9. 5	1910. 9.14	3,456호	南宮樾	국한문	張志淵・柳瑾사장
3	大韓每日 申報	1904. 7.18	1910. 8.28	1,461호	배 텔	국한문/국문	영문판 별도 梁起鐸・申采浩관여
4	國民新報	1906. 1. 6	1910. 8.	4년 7월	李容九	국한문	一進會 기관지
5	萬 歲 報	1906. 6.17	1907. 6.30	293호	吳世昌	국한문	루비활자 천도교 기관지
6	京鄉新聞	1906.10.19	1910.12.30	220호	드망즈	국 문	주간/천주교 기관지
7	大韓新聞	1907. 7.18	1910. 8.31	3년 1월	李人植	국한문/국문	萬歲報 인수 李完用내각 기관지
8	大韓民報	1909. 6. 2	1910. 8.31	357호	吳世昌	국한문	대한협회 기관지
9	慶南日報	1909.10.15	1915. 1	887호	金弘祚	국한문	격일간/晉州 발행 張志淵주필
10	大同日報	1909.10.19	?	?	張基世		주간에서 일간 친일지
11	時事新聞	1910. 1. 1	1910. 5. 8	?	閔元植	국한문	친일지
12	大韓日日 新聞	1910. 6. 4	?	?	金東集	국한문	大同日報 후신

〈표 1〉을 살펴보면, 1904년 7월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기까지 《帝國新聞》과 《皇城新聞》만이 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895년 일본인들이 창간한 한국어신문으로 《漢城新報》가 존재하였으나, 그것은 일제의 한국침략을 위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일본공사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 《대한매일신보》도 실제 신문제작은 한국인들이 하였지만, 그 발행인이 영국인 베텔(裴說, E. T. Bethell)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1898년에 최초의 일간신문인 《미일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민간신문들이 간행되었지만, 1900년 이래 《제국신문》과 《황성신문》만이 각기 국문과 국한문으로 발행되었던 것이다. 1906년에 이르러 一進會의 기관지로 《國民新報》가 발행되었고, 이어 天道敎에서 《萬歲報》를, 天主教에서는 주간으로 《京鄉新聞》을 창간하

였다. 1907년 이후 발행된 신문은 《大韓民報》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친일신문이었다.

#### 가. 《제국신문》

《제국신문》은 1898년 8월 10일자로 창간되어 1910년 3월 31일자까지 10년 넘게 발간되었던 순 국문신문이었다. 제호를 《태국신문》이라고 하다가 1903년 7월부터 《帝國新聞》이라고 고쳤다. 《황성신문》이 국한문체로 발행되어 양반이나 유림층을 대상으로 발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제국신문》은 순 국문으로 하층민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한말에는 흔히 이 신문을 ‘암(雌)신문’, 《황성신문》을 ‘수(雄)신문’으로 불렀다고 한다. 《제국신문》은 1898년 8월 3일에 농상공부로 신문 창간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국가의 개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을 발간한다고 밝히고 있었다.<sup>1)</sup>

이 신문은 李鍾一·柳永錫·李承晩 등과 以文社라는 인쇄소의 관여자들이 발행하였는데, 창간 직후부터 이종일이 신문을 전담해야만 하였다. 옥중에 있던 이승만이 1901년부터 1903년까지 27개월 동안 논설을 집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1899년 12월 화재로 인쇄시설이 전소된 이후 그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결국 1903년 1월부터 군부 代辦砲兵局長 崔岡이 사장에 취임하여 신문사를 일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해 6월 최강이 일본에서 구입해 온 揚武艦의 수뢰사건에 연루되어 신문사에서 손을 떼자 다시 이종일이 신문사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제국신문》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뿐 아니라, 일제의 신문 사전검열에 걸려 10여 차례의 휴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07년 5월 《대한매일신보》의 국문판 간행에 맞서기 위하여 지면을 확장하고 鄭雲復·李海朝 등을 영입하여 새롭게 신문을 발간하였으나, 여기에서 야기된 재정난은 결국 9월 21일 폐간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 각처에서 기부금이 모집되어 10월 3일자로 속간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10년 가깝게 신문사의 운영을 맡았던 이종일이 사임하고 정운복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정운복은 韓基準·鮮于叡(鮮于日) 등 관서지방 출신들을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하

1) 《光武二年訴狀及題存檔》(郵政博物館 소장).

였으나 계속 재정부족으로 곤란을 받았다. 그 발행부수는 일시 4,000부에 이르기기도 하였지만 2,000부를 겨우 넘기도 하였으며, 대체로 3,000부 내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법률과 풍속개량에 의한 민지계발을 내세우고 창간된 《제국신문》은 결국 그 목적은 국민계몽이었다. 따라서 국민에게 국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하층민의 지식계발을 실천하였으며, 국가발전과 국권수호를 위하여 국민의 실력양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계몽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신교육과 실업발달이 국권회복의 방편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국권회복을 위한 무장투쟁, 곧 의병투쟁에 비판적이었던 것 역시 계몽론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다르지 않았다.

1907년 정운복이 신문을 맡은 이후에도 《제국신문》은 문명개화론적인 관심이 계속되어 오히려 그 이전보다 계몽적인 내용의 연재물이 훨씬 많아지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친일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정운복이 통감부의 기관지였던 《京城日報》의 국문판 책임자 출신이었고, 선우에 또한 그 기자 출신이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았다.<sup>2)</sup> 그러나 《제국신문》은 결국 재정난으로 1910년 3월 31일자를 발행하고 4월 1일부터 휴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신문의 재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은 한일합병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1910년 8월 말에 폐간 또는 개제되었으나, 《제국신문》은 그와는 달리 재정난으로 일찍 폐간되었던 것이다. 지령은 대략 3,240호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sup>3)</sup>

#### 나. 《황성신문》

《皇城新聞》은 국문으로 발간되었던 《京城新聞》과 《대한황성신문》을 계승하였지만, 국한문으로 발행되었다. 그것은 일반대중이나 부녀자보다 전통적인

2) 또 1909년 12월 4일에 있는 一進會의 合邦請願聲明에 대하여 친일세력이 발간하는 신문을 제외하고는 격렬하게 일진회를 성토하였으나, 《제국신문》은 아무런 논박이 없어 여론의 질책과 의심을 받았다. 또 정운복의 친일내각 입각설이 있었고, 《제국신문》의 통감부 기관지 시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상 《帝國新聞》에 관해서는 崔起榮, 《〈帝國新聞〉의 刊行과 下層民 계몽》(《大韓帝國時期 新聞研究》, 一潮閣, 1991) 참조.

지배층인 유생들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까닭으로 짐작된다. 《황성신문》은 신문이 下情을 上達토록 하는 것이라고 논의하여,<sup>4)</sup> 여론의 형성과 전달에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황성신문사는 신문 발간과 기타 제반서류 인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황성신문》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에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창간되었다. 신문사의 자본금은 5,000원으로 1주당 10원씩 500주였으나, 필요에 따라 증자할 수 있게 하였다.<sup>5)</sup> 실제로 1905년 8월에 황성신문사에서는 300주를 증자하여 총 800주가 된다.<sup>6)</sup> 그러나 주주의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운영은 제국신문사와 다를 바 없이 어려웠고, 신문구독료의 납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정부족에 힘겨워 하였다. 1903년 초의 구독료 미수금이 7,000원에 이르러 정간의 위기까지 몰렸으나 2,000원의 의연금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하였다. 결국 고종황제가 1904년 7월에 9,000원의 내탕금을 하사하여 사옥을 새로 얻고 활자를 개량할 수 있었다.

사장직은 처음에 南宮樸이 맡았다가 1902년 8월에 張志淵이 그 뒤를 이었다. 장지연이 〈是日也放聲大哭〉을 게재하여 경무청에 체포된 이후 1906년 2월에는 南宮薰이 사장직을 맡았다가 5월에 金相天이, 그리고 9월에는 柳瑾에게 인계되었다. 유근의 뒤를 이어 1910년 6월 成善慶이 사장을 맡아 2개월간 재임하였다. 황성신문사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는 南宮樸·羅壽淵·洪在箕·姜華錫·金祥演·南宮薰·張志淵·柳瑾·金相天 등 30명이 넘었다. 《황성신문》의 주필로는 잘 알려진 대로 초기에 장지연이, 후기에는 朴殷植이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었다.<sup>7)</sup> 발행부수는 대개 3,000~4,000부를 오르내렸다.

《황성신문》이 유학자계층의 계몽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면, 창간 이후 1904년까지는 강역·제도·실학 등 전통문화에 대하여 주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보수적인 유학자들에게 전통문화를 새롭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1904년부터 1907년까지는 주로 외국의 망국·독립·개혁사를 통하여 그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

4) 《皇城新聞》, 1898년 9월 6일, 논설.

5) 崔起榮, 〈《皇城新聞社規則》·《皇城新聞社會議錄》해제〉(《한국근현대사연구》3, 1995).

6) 《皇城新聞》, 1905년 8월 16일, 사설.

7) 李光麟, 〈《皇城新聞》研究〉(《開化派와 開化思想 研究》, 一潮閣, 1989) 참조.

여, 베트남이나 이집트와 같은 망국의 예와 일본·이탈리아·프랑스와 같은 독립·개혁의 예를 소개하였다. 그 같은 경향은 이들 국가의 경우를 통하여 유럽들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교훈과 애국심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08년 이후에는 외국사기의 소개를 벗어나 한국사에 대한 긍정적 이해에 주목하였다. 단군숭배, 한국사의 고구려-발해 중심의 이해, 영웅과 국혼의 강조 등이 역사관계 기사를 통하여 찾아지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유학자들에게 자국사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한 이러한 시도는, 바로 1900년대 후반기에 지식인들의 주도로 전개되던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의 구체적 실천양상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1908년 이후 《황성신문》은 유학자들에게 그 이전처럼 실학만을 강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통유학 자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추구를 촉구하고 있었다. 儒敎求新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의병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미루어, 의병활동과 무관하지 않던 보수적인 전통유학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 다.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新報》는 1904년 7월 18일자로 국문으로 창간되었다. 영국인 베텔이 사장이었고, 梁起鐸이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간행에는 황실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한 시기로 국내에 설치된 일본의 경무고문부에서 한국인 발행의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이 준비되고 있었다. 황실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외국인을 내세워 신문을 발행하고자 하였던 것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대한매일신보》가 국문으로 발행된 것은 하층민의 계몽이 시급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인데, 더욱이 한 면은 영문판으로 구성되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편집은 크게 유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신문사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지배층이고 지식층인 유학자계층의 계몽을 전제로 하여 신문을 국한문판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1905년 3월

8) 崔起榮, <《皇城新聞》의 역사관련기사에 대한 검토> (《韓國近代啓蒙運動研究》, 一潮閣, 1997).

10일자를 발행한 이후 5개월을 휴간한 것은 바로 그 준비 때문이었고, 드디어 그 해 8월 11일자부터 《대한매일신보》는 국한문체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영문판 《The Korea Daily News》는 따로 발행하였으며, 하층민의 계몽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1907년 5월 국문판을 별도로 간행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을 발행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와 정부의 신문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제의 국권침탈과, 친일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거리낌없이 비판하였다. 통감 伊藤博文이 1907년 초 일본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이 있다.

…現今 韓國에서 發行하는 一外國人の 毎日報는 確證이 有한 日本의 全般惡政을 反對하야 韓人을 煽動함이 連續不絶하미 此에 關한 機會에 就하야는 統監이 難可受責이로다…(《大韓毎日申報》, 1907년 2월 12일 잡보 〈伊藤演說〉).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반일적인 신문이라고 지적할 만큼, 일제의 한국침탈을 비판해 왔던 것이다. 일제가 베텔의 추방작업을 1906년 7월부터 시작하였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의병활동에 대해서 다른 신문들에 비하여 매우 호의적이었다. 《황성신문》이나 《제국신문》은 의병투쟁이 국권회복을 위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다.

신문사는 양기탁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는데, 특히 申采浩·張道斌 등이 논설기자로 활동하였다. 그 밖에 林崑正·玉觀彬·薛泰熙·卞一·姜文秀·李交倓·李章薰·黃義性·俞致兼·金演昶 등도 신문사에 재직하였다. 그 발행부수는 한말 발행되던 신문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아 1908년 5월 일제측의 조사에서도 국한문판이 8,143부, 국문판이 4,650부, 영문판이 463부로 모두 13,256부로 나타났다. 또 1908년 8월의 조사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국한문판과 국문판의 발행부수가 《제국신문》·《황성신문》·《국민신보》·《대한신문》의 합계와 비슷하였다.

통감부는 《대한매일신보》의 국권회복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베텔의 추방을 계속 추구하였다. 결국 베텔은 1908년 6월 영국 고등법원에서 3주간의 禁錮와 보증금의 납부라는 판결을 받아 상해로 가서 금고형을 치렀다. 베

텔은 이 일로 건강이 악화되어 1909년 5월 사망하고 만다. 또 통감부는 1908년 7월 양기탁을 국채보상금의 횡령혐의로 구속하였지만, 영국정부의 항의로 9월에 석방되었다. 베델은 1908년 5월부터 그의 비서 맨함(萬咸, A. Marnham)에게 그 경영을 맡겼으나, 그는 베델이 죽은 후 통감부의 회유로 1910년 6월 신문사를 이장훈에게 인계하고 말았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이 되자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의 기관지 《每日新報》로 제호가 바뀌어 계속 간행되었다.<sup>9)</sup>

라. 《만세보》·《경향신문》·《대한민보》·《경남일보》

《萬歲報》는 1906년 6월 17일자로 창간되었는데, 천도교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그 해 1월 일본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한 천도교 교주 孫秉熙와 문명개화에 관심을 두고 있던 그의 측근 權東鎭·吳世昌 등이 국내 기반의 확대와 천도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발간 목적이었다. 주필 李人植의 명의로 내부에 제출한 신문발간 청원서에는 “國民의 風化를 鼓發하며 智識을 補導하기 爲하야” 신문사를 설립한다고 하였다.<sup>10)</sup> 천도교에서는 국민계몽을 내걸고 교육사업과 출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한문으로 발행된 이 신문은 한자 옆에 루비활자를 달아 국문밖에 알지 못하는 계층도 독자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천도교는 1906년 8·9월경 政敎分離를 내걸고 일진회와 대립하여 결별하게 되는데, 이후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져 신문사도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1907년 6월 30일자 호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만다. 이 신문사는 정부에 매각되었고, 친일 李完用내각은 그 해 7월 18일자로 기관지 《大韓新聞》을 발간하였다. 그 사장에는 만세보사의 주필이던 이인직이 취임하였다.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발간한 만큼 드러나지 않게 교회의 홍보기능을 하였으며, 천도교 교리서도 자주 연재하였다. 대략 2,000부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신문은 실력양성론에 입각하여 지식계발과 풍

9) 《大韓每日申報》에 관해서는 李光麟, 〈《大韓每日申報》刊行에 대한 一考察〉(《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와 鄭晉錫, 《大韓每日申報》와 裏說》(나남, 1987)을 참고할 것.

10) 《萬歲報》상(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85) 수록문서.



속개량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천주교회에서도 《京鄕新聞》을 1906년 10월 19일자로 창간하였다. 순 국문의 주간지였던 이 신문은 국민계몽과 아울러, 천주교인의 권익보호, 그리고 교회 자체의 기관지의 필요성에서 발간되었던 것 같다. 또한 개신교회의 교세 확장과 신문 발간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순수한 종교신문이 아닌 일반 시사신문이었다. 따라서 비신자들을 독자층으로 인식하여 교세 확장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 제작에는 드망즈(F. Demange)신부와 金元永신부가 관여하였고, 李建洙가 실무책임자였다. 외국인 신부가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대한매일신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명의의 신문은 통감부의 사전검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의 예산으로 발간되었으므로 재정은 풍족하였고, 발행부수도 4,000~5,000부에 이르렀다.

《경향신문》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정치불간섭주의를 내세워, 현실정치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현실수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실정법을 중시하였으나 정치적인 법령에는 무관심하고 주로 민생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였다. 정신적인 개화와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호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개신교 선교사를 많이 파견한 미국에 비우호적이었다. 그 폐간은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의 강요로 일반 시사신문으로의 발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경향잡지》라는 순수종교잡지로 전환하고 말았다.<sup>12)</sup>

《大韓民報》는 대한협회의 기관지로 발행된 것이었다. 1907년 11월 尹孝定·장지연 등에 의하여 발기된 대한협회는 1908년 4월부터 1909년 3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大韓協會月報》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다가, 1909년 6월 2일자로 《대한민보》를 창간하였다.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고 국민의 행동을 일치하게 하여 자강으로 국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신문 발간의 목적으로

11) 《萬歲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에는 崔起榮, 〈天道敎의 國民啓蒙活動과 《萬歲報》의 發刊〉(앞의 책, 1991)가 참고된다.

12) 《京鄕新聞》에 관해서는 崔起榮, 〈天主敎會의 《京鄕新聞》 刊行〉(위의 책)을 참조할 것.

삼고 있었다.

대한협회는 일간지를 발행하기 위해 이미 1909년 초부터 계획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제국신문》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자 별도로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보》 역시 창간 이후 재정부족으로 말미암아 곤란을 받았으면서도, 한때 발행부수가 6,200부나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은 오세창이 맡았으며, 장효근·崔榮穆·李鍾麟 등 천도교인들이 신문사에 관여하였다. 특히 《대한민보》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1면 중앙에 게재되었던 삽화였다. 주로 이완용내각과 일진회를 풍자하거나 우국충정을 보이는 계몽적인 것이었다. 그 당시 화가로 이름 높던 李道榮이 담당하고 있었다.<sup>13)</sup>

한말 유일한 지방신문으로 晉州에서 발행되던 《慶南日報》가 있었다. 이 신문은 가장 문명개화가 늦었다고 평가받던 경남지역의 유지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것이었다. 그 주도적인 인물은 金弘祚·金榮鎭·金琪郇 등이 있었고, 경남관찰사 黃鐵道 크게 지원하였다. 주필에는 황성신문사장을 역임한 장지연이 초빙되었는데, 직접 신문제작에 관여한 인물들은 주로 하급관리를 역임한 경남의 지주와 자산가들이었다.

1909년 10월 15일자로 창간된 국한문의 《경남일보》는 국민계몽이 양반·유림층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2,000부 정도가 발행되었으나, 재정적으로는 어려웠다. 그 주된 관심은 실업장려와 민지개발이었는데, 특히 정치문제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바 있었다. 따라서 그 내용도 국가의 위기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친일적인 경향까지 보이고 있었다. 또 지방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유교적인 입장이 강조되었다. 1910년 8월 이후 《대한매일신보》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로 개제되고 중앙의 나머지 신문들이 모두 폐간되었지만, 《경남일보》만은 폐간되지 않았다. 대신 사설이 없어지고 사전검열을 계속 받았다. 본래 일간으로 출발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격일간으로 발행되었다.<sup>14)</sup>

13) 金項勾, 《大韓協會(1907~1910)研究》(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92), 162~180쪽.

14) 《慶南日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崔起榮, 〈晉州의 《慶南日報》: 唯一의 地方紙〉(앞의 책, 1991)에서 구할 수 있다.

### 마. 친일신문

《제국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만세보》·《경향신문》·《대한민보》 등은 일제의 한국침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고자 한 신문들이었다. 그러나 이 밖의 《국민신보》·《대한신문》·《大同日報》·《時事新聞》 등은 친일세력들에 의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들이었다. 실제로 1904년 8월 이후 한국인 명의로 발간되는 신문들은 일제의 언론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즉 그것은 8월 20일 주한일본군사령부에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의 주무원을 불러 군사상 사향의 신문게재 금지와 신문의 사전검열을 통고하였기 때문이다.<sup>15)</sup> 사전검열은 1905년 2월 이후 警務顧問部가 개설되자 그 곳으로 이관되었다.

1906년 이후 창간된 신문들은 외형적으로 농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통감부와 경무고문부가 관여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1906년 이후 창간된 신문들은 그 대부분이 비록 종교신문이 아니라 일반신문이라 하더라도 종교기관이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발행된 것들이었다. 1906년 1월 6일자로 창간된 《국민신보》는 바로 친일세력인 일진회의 기관지였다. 일진회는 잘 알려진 대로 1904년 8월 일제가 한국침탈에 필요한 한국민의 여론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宋秉畯 등을 내세우고, 그 해 12월 東學의 조직인 進步會와 합동한 친일정치단체였다. 《국민신보》가 일제의 여론조작에 필요한 언론기관으로 출발하였음은 자명하다.

### (2) 국외신문

1900년대 후반기,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하던 시기에는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국외의 교포사회에서도 신문이 발간되었다. 1860년대 이래 러시아령지역과, 1900년대 전반기부터 노동이민이 시작된 미주지역에 교포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표 2>는 그 당시 해외에서 발행된 교포신문을 정리한 것이다.

15)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23일, 잡보 <신문검열>.

〈표 2〉 한말 해외교포신문의 발행현황(1904~1910)

발행지역	제 호	창 간 일	중 간 일	발행인	간행구분	형 태	발 행 처
하 와 이 (호놀룰루)	신조신문	1904. 3.27	14개월	최운백	격 주	등사판	
	한인시사	1905. 6.10	15개월	최운백	격 주	등사판	감리교
	합성신보	1907.10.22	1909. 1.25	洪宗杓	격주/주간	등사/활판	韓人合成協會
	新韓國報	1909. 2.15	1913. 8. 6	洪宗杓	주 간	활 판	大韓人國民會 하와이총회
미주본토 (샌프란 시스코)	共立新報	1905.11.22	1909. 1.27	宋錫峻	격주/주간	석판/활판	共立協會
	大同公報	1907.10. 3	1908. 4. 9	文讓穆	주 간	석판/활판	大同保國會
	新韓民報	1909. 2.10		崔正益	주 간	활 판	大韓人國民會 북미총회
러시아령 (블라디 보스톡)	히조신문	1908. 2.26	1908. 5.26	崔鳳俊	일 간	활 판	
	大東共報	1908.11.18	1910. 9. 2	兪鎭律	주 2회	활 판	

## 가. 미주본토

해외교포신문으로 처음 발행되었던 것은 하와이에서 1904년 3월 27일자로 창간된 《신조신문》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1902년 12월에 하와이로의 노동이민이 시작된 이래, 하와이에 형성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격주간의 《신조신문》 등이 발간되었던 것이다. 미주 본토에서는 1905년 4월에 교포단체로 샌프란시스코에서 共立協會가 조직되었는데, 그 기관지 《共立新報》가 그 해 11월 22일자로 창간되었다. 교포신문의 특징은 모두 국문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활자문제를 포함하여 이민자들의 교육정도와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포신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한 교포들의 계몽과, 거주국에서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동시에 일제에 의하여 국권을 침탈당하던 고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논의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이들 교포신문은 국내에도 유입되었는데, 검열을 받지 않았으므로 일제의 국권침탈의 부당성과 국권회복론 등 강렬한 항일논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1908년 4월의 신문지법 개정이 바로 이들 교포지에 대한 압수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은 잘 알

려진 일이다. 실제로 1908년과 1909년의 경우, 교포신문들은 175회의 압수처분에 의하여 약 18,000부가 압수되었던 것으로 일제가 조사한 바 있었다.<sup>16)</sup> 교포신문의 발행은 대부분 교육을 받거나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인물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교포신문의 재정은 매우 취약하였는데, 미주의 경우에는 교포들의 의연이, 러시아령의 경우에는 유력교포의 출자가 주된 수입원이었다.

《공립신보》와 그것을 계승한 《新韓民報》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공립신보》의 창간사에 의하면 교포사회에서의 애국심 고양과 계몽, 그리고 본국과 교포사회의 실상을 알려 서로 깨닫게 한다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교포사회의 계도와 본국과의 연계를 신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초기의 교포신문들은 石版 또는 등사판으로 발행되다가 활판으로 바뀌었다. 《공립신보》의 경우, 석판과 등사판으로 30호가 발행된 뒤, 1907년 4월 26일자부터 활판으로 발간되어 1909년 1월 27일자까지 총 118호가 발행되었다.

1909년 2월 1일 하와이의 교포단체인 韓人合成協會와 공립협회가 國民會로 통합되었다. 각 기관지였던 《공립신보》와 《합성신보》가 《신한민보》와 《新韓國報》로 개제되었다. 또 1910년 2월 10일 국민회는 大同保國會와 통합하여 大韓人國民會로 확대되었는데, 《신한민보》가 역시 그 기관지였다. 대동보국회에서도 《大同公報》라는 주간지를 발간한 바 있었다. 교포신문들의 재정은 매우 빈약하였지만, 교포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교포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재정부족을 겨우 메워 나가면서도 신문을 발행하였다.

대한민국민회는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교포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진력한 미주의 대표적인 단체였다. 그러므로, 《신한민보》의 논조도 반일적이면서 교포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었고, 민족 전체의 대표기관으로 자임하였다. 주로 주간 4면으로 발행되었던 《신한민보》는 1910년 국권침탈 이전에는 국내에도 유통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국내유통은 불가능하였고, 하와이·멕시코·遠東 등지

16) 崔起榮, 〈光武新聞紙法 研究〉(앞의 책, 1991), 285~288쪽.

에는 배포되었다. 1910년 현재 3,000부를 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간 비용의 상당부분을 교포들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편집은 崔正益・鄭在寬・李恒愚・姜永大 등 공립협회나 국민회의 간부진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문의 세로쓰기로 간행되었고, 논설을 비롯하여 대한인국민회 관련사항, 국내와 재미교포 및 원동 등지의 교포에 관한 소식, 그리고 소설이나 번역・투고 등이 실렸다.<sup>17)</sup>

1910년 대한인국민회로 합류할 때까지 공립협회와 대립하고 있던 대동보 국회에서도 《大同公報》를 주간으로 발간하였다. 1907년 10월 3일자로 창간된 이 신문은 7호까지 석판으로 발행되다가, 이후 활판으로 1908년 4월 9일자까지 모두 25호가 발행되었다. 신문 발간에 관여한 文讓穆・崔雲伯・白一圭・李學鉉 등은 모두 대동보국회의 임원들이었다. 이 신문은 재정난으로 폐간되었는데, 발행부수도 2,000부가 되지 않았다. 《대동공보》는 그 사명을 保國에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군주 중심의 국권회복을 지향한 것으로 짐작된다. 신문에도 본국의 의병에 관한 보도가 빠지지 않았고, 교포와 대동보국회에 관한 기사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동공보》는 그 발행기간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sup>18)</sup>

#### 나. 하와이

하와이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신문은 하와이에 있는 교포단체의 통합으로 1907년 10월 22일자로 창간된 《합성신보》와, 그것을 이은 《新韓國報》였다. 이미 하와이에서는 1904년 《신조신문》과 1905년 《한인시사》가 격주로 발간되었으며, 또 《電興協會報》나 《自新報》 등의 잡지도 발간된 바 있었다. 1907년 하와이에 병립해 있던 교포단체들이 통합되어 한인합성협회를 결성하자 그 기관지로 《합성신보》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1909년 2월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와 한인합성협회가 통합되어 국민회를 결성하면서 각기 기관지의 명칭을 바꾸어 발행하게 되었다. 《합성신보》는 1909년 2월 15일자로 《신한국보》로 개

17) 《共立新報》와 《新韓民報》에 관해서는 崔起榮, 〈美洲僑胞의 反日言論: 《共立新報》・《新韓民報》의 刊行〉(앞의 책) 참조.

18) 崔起榮, 〈美洲 大同保國會의 國權회복운동〉(앞의 책, 1997), 250~256쪽.

제되었고, 《신한국보》는 《합성신보》의 발행일을 창간기념일로 삼아 그 전통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신한국보》는 洪宗杓(洪蔭)·韓在明·朴相夏·姜永韶·李恒愚 등이 관여하였으며, 논설·시사·전보·제국시보·국민회보·기서·번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교포신문과 마찬가지로 《신한국보》는 국권회복과 교포계몽, 그리고 교포권의 증진을 목적으로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총회의 기관지였던만큼 국민회에 관련된 사항들이 적지 않았고, 신문사의 경비나 임원들 역시 국민회와 무관하지 않았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의 기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와 그 성격을 같이하였던 것이다. 특히 노동이민이 주를 이루었던 하와이교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노동조건과 교육, 실제 학문과 실천을 강조하고, 게으름과 사치를 비난하는 논설을 많이 실고 있었다. 또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國民須知》나, 신채호의 〈讀史新論〉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신한국보》는 1913년 8월 6일자로 총 250호가 발행되다가, 8월 13일자부터 《國民報》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sup>19)</sup>

#### 다. 러시아지역

미주에 이어 러시아령에서도 교포신문의 발간이 있었는데, 그 효시는 《히조(堯)신문》이었다. 1908년 2월 26일자로 창간된 이 신문은 崔鳳俊이 사장을 맡고 있었다. 최봉준은 함북 경흥출신의 러시아 귀화인으로 러시아령 교포 가운데 대표적인 자산가였다. 연해주 지사의 허가를 얻어 발간한 이 신문은 ‘海蔘威(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는 조선인 신문’이라는 의미에서 《히조신문(海朝新聞)》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히조신문》이 비록 3개월밖에 간행되지 못하지만, 활판으로 인쇄한 일간신문이었다는 점이다.

《히조신문》의 창간을 주도한 것은 鄭淳萬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輔安會 활동에도 참여하고 尙洞靑年會의 부회장도 역임하였는데, 1906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여 최봉준과 협력하여 신문 간행을 추진하였다. 그 발간

19) 하와이에서 발행된 교포신문과 잡지에 관해서는 車培根, 〈布哇韓僑新聞史略攷〉(《新聞學報》 13, 1980)와 崔起榮, 〈한말—일제시기 미주의 한인언론〉(《한국근현대사연구》 8, 1989) 참조.

취지서를 보면 신문을 통하여 교포를 계몽하여 실력양성을 도모하고, 국민정신을 배양하며 국권회복을 주장하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었다. 이는 결국 노령교포의 구제와 국권회복을 위하여 신문을 발간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신문제작을 위하여 국내에 있던 전 황성신문사장 장지연을 주필로, 李剛·金河球 등을 편집·기자로 초빙하였다. 이 신문은 국문 4면으로, 일요일과 부활절 다음날만을 제외하고 매일 발행되었는데, 러시아가 러시아정교를 국교로 하고 있던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발행부수는 400~500부에 지나지 않았다.

《희조신문》의 내용은 국권회복과 노령교포의 계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국권회복을 위하여 망국인이 되지 않도록 고국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1908년 3월 17일자 의 〈고국을 도라다 보시오〉와 같은 논설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권회복에 관심을 집중시킨 나머지 노령교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는 소홀하여, 당시 교포들의 생존문제에 대한 기사는 별반 신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교포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하였다. 이처럼 국권회복에 대한 논의는 일제의 반발을 사게 되고, 일제는 국내와 무역을 하던 최봉준에게 압력을 가하여 결국 1908년 5월 28일자 제7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0)</sup>

러시아령의 교포사회에서는 《희조신문》의 폐간 직후부터 새로운 신문의 창간이 준비되었다. 이 때까지 러시아지역에서는 교민단체가 활발하지 않아, 신문은 교포사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었다. 해조신문사의 인쇄시설을 구입하여 1908년 11월 18일자로 창간된 것이 《大東共報》였다. 노령동포들의 문명개화와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이 신문은 발행인으로 러시아인을 내세우고, 사장에 車錫甫가 취임하고 俞鎮律·이강·정순만 등이 참여하였으며, 崔在亨·李尙雲·鄭在寬·韓馨權 등도 뒤에 관여하였다. 주 2회, 1,500부 가량 발행된 《대동공보》는 국내의 의병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동포들의 계몽운동을 지원하여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일제의 국권 침탈과 만행을 규탄하였다. 아울러 러시아거주 한국인의 생활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 교포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0) 박 환, 〈재러한인 민족운동의 태동과 《희조신문》의 간행〉(《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참조.



특히 《대동공보》는 安重根의 이등박문포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다. 안중근은 이 신문사의 탐방원으로 煙秋지방의 지국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등박문의 포살을 대동공보사의 관여자들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09년 한 해에만 국내에서 압수된 《대동공보》가 57건 2,235부였던 것만으로도, 이 신문이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며 국권회복에 진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10년 7월 한일합병 직전, 러시아는 일본과 협약을 맺어 러시아내에서 한국인의 활동을 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동공보사에서는 폐간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1910년 8월 18일자로 《大東新報》라고 제호를 바꾸기도 하였으나, 결국 지령 250호인 9월 1일자로 폐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1)</sup> 유진울 등은 이후 1911년 《大洋報》와 1912년 《勸業新聞》을 발행하여, 계속 국권회복과 국민계몽을 내세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신문은 勸業會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 2) 한말 언론의 국권회복운동

### (1)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저항

한말의 민족언론은 일제의 한국침략, 즉 국권침탈에 저항하고 있었다. 1904년 2월 발발한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한국식민지화 기도가 명백해지고, 특히 그 해 6월 황무지개척권 요구가 있자 신문들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발하며, 그 반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보안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던 것이다. 《황성신문》이 황무지개척권을 한국민에게 허가할 것을 주장한 것도 일제의 경제침략에 대한 반대였다.<sup>22)</sup> 일제가 보안회의 움직임을 빌미로 군사경찰을 실시하며, 8월부터 한국인 발행의 신문에 대한 검열을 시행한 것도 그러한 까닭에서였다. 이 시기에 한국인의 명의로 발행되던 신문은 《황성신문》과 《제국신문》뿐이었다.

21) 慎鋪度, 〈《大東共報》解題〉(《大東共報》, 國家報勳處, 1993).

박 환, 〈《대동공보》의 간행과 재러한인 민족운동의 고조〉(《위의 책》).

22) 예컨대 1904년 《황성신문》의 경우, 〈論山林澤認准說〉(6. 20) · 〈請質政府諸公〉(6. 29) · 〈開墾陳荒宜認許我民〉(7. 4) 등의 논설에서 확인된다.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은 민족언론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11월 초 일진회의 보호청원이 발표되자 《제국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는 이를 반박하였으며, 을사조약이 강제체결되자 《황성신문》은 11월 20일자에 〈是日也放聲大哭〉을 검열을 거치지 않고 게재하여 정간되고 말았다. 이 논설은 잘 알려진 대로 한국민의 반일의식을 크게 고양시켰다. 이와 함께 《대한매일신보》가 11월 21일자에 〈皇城義務〉을 실어 《황성신문》을 지지하였고, 11월 27일자로 이 문제에 대한 호의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 호의는 앞면에 한문으로 〈韓日新條約請締願末〉을 싣고, 뒷면에는 〈是日也放聲大哭〉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던 것이다. 또 《대한매일신보》는 1906년에도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한 閔泳煥·趙秉世·宋秉璿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1907년 1월 16일자에는 고종이 을사조약에 조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밀서를 사진으로 게재하여 일본을 당혹하게 만들었다.<sup>23)</sup> 다만 《제국신문》은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에 대하여 11월 22·23일자에 걸쳐 〈한 썩 분함을 참으면 백년 화근을 면함이라〉는 논설로, 국민에게 후일을 대비하여 실력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자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1904년 8월 이후 일제의 사전검열로 한국인 명의로 발간되던 《황성신문》이나 《제국신문》, 그리고 1906년에 창간된 《만세보》 등은 직접적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하여 비판하고 저항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 신문은 부분적으로 통감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일제의 주구로 알려진 일진회와 친일정권·정부고관들을 공격하고, 한국이 처한 위치를 설명하고 실력양성을 강조하여 한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국권회복의식을 고양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일제침략에 저항하고 있었다. 1906년 한 해 동안 사전검열로 삭제된 기사가 《제국신문》이 13건, 《황성신문》이 7건, 《만세보》가 6건이었는데,<sup>24)</sup> 그 내용은 대체로 간접적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비판한 것이었다.

23) 이 옥쇄가 찍힌 밀서는 1906년 1월 말 영국 *The Tribune*의 특파원 스토리(D. Story)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1906년 12월 1일의 *The Tribune*에 실린 사진을 복사하여 《대한매일신보》에 실었던 것이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23일, 논설 〈스토리氏受書〉와 1월 24일, 논설 〈更論스토리氏受書〉 참조).

24) 岩井敬太郎 편, 《顧問警察小誌》(韓國 内部 警務局, 1910), 125~128쪽.

이러한 한국인 명의의 신문과는 달리 영국인 명의로 발행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비판하였다. 1907년 초 통감 이등박문은 일본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반일적인 신문이고, 그 영향력이 지대함을 시인한 바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sup>25)</sup> 또 당시 신문관계자가 독자들이 사전검열을 받지 않던 《대한매일신보》만을 신뢰한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sup>26)</sup> 따라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민족 언론의 저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매일신보》는 의병항쟁에 대해서 다른 신문들에 비하여 매우 호의적이었다. 《황성신문》이나 《제국신문》·《만세보》가 의병투쟁이 국권회복을 위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다. 《대한매일신보》도 1906년 5월 30일자 의 논설 〈義兵〉에서는 의병투쟁이 때와 힘을 살피지 않은 폭거라고 규탄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이 계속되고 의병항쟁이 격화되자, 의병항쟁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1909년 7월 28일자부터 8월 1일자까지 5차례에 걸쳐 〈義兵總大將 李麟榮의 略史〉를 게재하였고, ‘지방소식’을 비롯하여 ‘의병소식’·‘의병상보’·‘의병정형’ 등의 항목을 만들어 의병활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 통감부의 조사에 따르면 의병들 가운데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비분강개하여 의병에 가담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황성신문》과 《제국신문》도 의병들의 활동을 보도하고 있었으나, 실력양성을 우선으로 삼고 있었던 만큼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는 실력양성을 중시하면서도 의병항쟁에 대해서도 적극 호응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진회나 친일대신 등 친일파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1908년 4월 2일자에 〈日本의 三大忠奴〉와 같은 논설을 게재하여, 당시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宋秉峻(일진회)·趙重應(東亞開進教育會)·申箕善(大東學會) 등을 비판한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가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을 반대하고 매국대신을 통렬히 비난하며 통감부의 식민지화

25)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12일, 잡보 〈伊藤演說〉.

26) 《帝國新聞》, 1907년 4월 9일, 잡보 〈丸山顧問과 各新聞記者〉.

정책 등을 비판하는 등 반일적인 논조를 견지하자,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신보》나 이완용내각의 기관지 《대한신문》 등이 이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매일신보》는 친일세력의 신문에 대한 논박도 계속하였다.<sup>27)</sup> 반대로 일제의 한국침략에 비판적인 헐버트(H. B. Hulbert)나 매켄지(F. A. McKenzie)의 활동과 일본정책에 대한 비판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친일적인 외교고문 스티븐스(D. W. Stevens)포살사건이나 안중근의 이등박문포살사건, 李在明의 이완용살해미수사건 등에 관해서도 《대한매일신보》는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일제의 대한정책을 비난하였다. 일제침략의 선두에 섰던 인물들에 대한 의열투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권회복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1908년 3월 6일자부터는 〈官報〉의 게재를 일시 중지하였는데, 일본인의 한국관직 임명으로 한국의 《관보》가 일본인의 《관보》에 지나지 않게 되었음을 강조하여 일제의 보호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다.<sup>28)</sup>

이러한 《대한매일신보》의 반일국권회복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자, 통감부에서는 일찍부터 베텔의 추방공작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영국인을 발행인으로 하고 있던 이 신문에 대해서는 일제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통감부에서는 신문지법의 제정과 개정으로 《대한매일신보》의 규제를 시도하면서, 베텔을 1907년 10월 9일 영국총영사관에 기소하였다. 《대한매일신보》와 《Korea Daily News》가 공중평화를 방해하고 인민을 정부에 반대하여 봉기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sup>29)</sup> 10월 14일의 재판 결과 10월 15일 베텔은 유죄가 인정되어 6개월

27) 예컨대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10·11일, 논설 〈討國民新報〉를 비롯하여, 같은 해 12월 17일, 논설 〈爲國民・大韓兩新聞招魂〉, 12월 18~22일, 논설 〈大韓新聞魔記者아 一覽〉, 1908년 10월 9일, 논설 〈休矣休矣魔報여〉, 1909년 5월 21·22일 논설 〈國民魔記者아〉, 5월 23일, 논설 〈國民・大韓兩魔頭上各一棒〉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28) 《대한매일신보》의 반일언론에 대해서는 李光麟, 〈《大韓每日申報》刊行에 대한 一考察〉, 268~276쪽 참조.

29) 구체적으로는 1907년 9월 18일의 논설 〈地方困難〉과 10월 1일의 논설 〈貴重한 줄을 認히어야 保守한 줄을 認히지〉, *Korea Daily News* 9월 21일 〈Where is the Master of Ceremonies?〉 등의 기사가 소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켜 공안을 해친다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의 근신과 보증금의 공탁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추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한매일신보》의 논조는 더욱 반일적이 되어 한국민의 국권회복의식을 고취시켰다. 통감부에서는 다시 베텔의 추방공작을 진행시켜, 1908년 5월 27일 베텔을 영국의 淸・韓高等裁判所에 고소하였다. 고소 이유는 1908년 4월 17일자 的 잡보 〈須知分砲殺詳報〉와 4월 29일자 논설 〈百梅特捏(메테르니히)이不足以壓伊太利〉, 5월 16일자 〈學界의 花〉가 질서문란・폭동격려・치안방해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정된 재판에서 베텔은 유죄처분을 받아 3주간의 금고와 보증금의 납부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상해로 가서 금고형을 치렀는데, 이 일로 건강이 악화되어 신문사를 사임하였고 1909년 5월 사망하고 만다.

이처럼 《대한매일신보》가 중심이 된 민족언론은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인 명의로 발행되던 신문들은 《대한매일신보》에 비하여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고 제국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국권회복의 의지는 뚜렷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신문은 논설과 기사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형성하고 국민계몽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2) 국채보상운동의 주도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29일 대구의 廣文社라는 출판사에서 金光濟・徐相敦 등에 의하여 발기되었다. 민간에서 이 같은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은 1904년 8월 제 1차 한일협약의 체결로 일본인 재정고문이 고빙된 이래 급증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과 관계가 있었다. 특히 일제는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시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한국침략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율의 국채를 起債하고 일본차관으로 조달하였던 것이다. 1907년 초 한국정부의 대일차관은 1,300만 원에 이르렀는데 그 액수는 정부의 1년예산과 맞먹는 정도였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국채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광제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2천만 동포가 3개월 동안 금연하여 모금한 돈으로 민간에서 국채를 보상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곧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갔다. 2월 말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에 국채보상을 목적으로 한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sup>30)</sup>

이처럼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간에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언론활동에 크게 힘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에서 발간되던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하여 《황성신문》·《제국신문》·《만세보》 등은 2월 광문사에서 국채보상을 결의한 사실을 보도한 이래 이 운동의 확산에 진력하였다. 즉 〈國債一千三百萬圓報償趣旨書〉·〈國債報償期成會趣旨書〉 등을 소개하고, 논설로 국채보상운동의 중요성과 함께 그 참여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황성신문》과 《만세보》는 즉각 신문사에 모금처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였으나,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그러한 움직임을 찬양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함을 들어 의연금의 수납을 하지 않고자 하였다. 즉 《제국신문》은 1907년 2월 28일자부터 3월 5일자까지 5차례에 걸쳐 〈국채보상금 모집에 관한 소정〉을 게재하고, 3월 2일자 잡보에는 〈收金謝絶理由〉를 밝힌 바 있었다. 또 《대한매일신보》도 3월 1일자에 〈한人忠愛〉를, 3월 6일자에 〈國債報償〉이라는 논설을 싣고, 3월 5일자부터 광고로 의연금을 수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내 오는 의연금은 명단과 금액을 신문에 수록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 신문들도 계속 확대되는 국채보상운동의 열기를 방관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신문사내에 모금처를 설치하고 신문이 그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기성회 등의 취지서와 의연금납부자의 명단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국채보상운동에는 고관이나 양반·부유층뿐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로부터 상인·군인·학생·기생·승려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지 않은 계층이 없었다. 여성들의 참여도 놀라워, 찬값을 절약하거나 비녀와 가락지 등을 의

30) 국채보상운동 전반에 관해서는 愼鏞廈 외,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亞細亞文化社, 1994)를 참조할 것.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崔竣, 〈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 캠페인〉(《白山學報》 3, 1967; 《韓國新聞史論攷》, 一潮閣, 1976)과 鄭晉錫, 〈國債報償運動과 言論의 역할〉(《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에 상세하다. 이하의 논의는 이들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언론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일본유학생들과 미주와 노령의 교포들도 의연금을 보내 왔고, 일부 외국인들도 참여하였다. 황제와 정부대신들도 금연을 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모금이 시작된 지 3개월 뒤인 5월에는 약속된 모금액이 20만 원에 달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여러 차례 부록을 발행하면서까지 의연금 납부자의 명단과 금액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1907년 말부터 모금은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바로 일제의 방해 때문이었다. 일제는 국채보상운동이 그 발기 직후부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공작을 전개하였다. 즉 국채보상 관런기구의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탄압을 시도하였다. 그 발행인 영국인 배텔의 추방공작을 전개하면서, 1908년에는 양기탁에게 국채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구속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채보상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는데, 양기탁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국채보상운동의 지도부는 모금보다도 모금액의 보관과 조사, 감독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모금된 의연금의 처리를 위하여 1909년 국채보상금처리회가 조직되어, 그 기금을 교육사업에 쓰자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모금된 금액은 대략 20만 원 내외였던 것 같다.

국채보상운동에 있어 신문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의연금의 대부분이 신문사를 기탁처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1909년 7월 일본군 헌병대에서 조사한 의연금 총액은 다음과 같았다.<sup>31)</sup>

대한매일신보	36,000여 원
신보사내 총합소	42,308원 10전
황성신문	82,000여 원
제국신문	8,420원 6전
만세보-대한신문	469원
국채보상기성회	18,700원 22전 7리
총 계	187,787원 38전 7리

31) 鄭晉錫, 위의 글, 214~215쪽.

이 자료의 정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전체 모금액의 90%가 신문사 또는 신문사내의 모금처로 납부되었다는 사실은 신문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 (3) 국민계몽과 애국심의 고취

한말 신문들은 국민계몽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치에 놓이게 되자, 국민계몽은 국가의 부국강병이라는 지향보다 국권회복을 위한 준비라는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따라서 국권회복을 위한 국민계몽이 민족언론들의 중요한 관심이었다. 1905년을 전후하여 전개된 이른바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것이 신문이었던 만큼, 신문은 교육개발과 산업발전을 내세우며 실력양성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국민계몽을 위하여 신문들은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신교육운동을 적극 지지하였고, 지원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경우,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논설의 50% 이상이 국내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 교육문제였다고 한다.<sup>32)</sup>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당시 신문들의 공통적인 경향이었다. 실제 신문들은 국력이 교육의 발달 정도에 좌우되며, 국권회복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을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33)</sup> 《황성신문》은 1906년 3월 27일자 논설 〈對申觀察興學訓令警告實行〉에서 “現今我韓之急務는 在開發民智而已오 其開發民智之方은 在興學校・讀新聞而已니”라고 한 바 있었다. 모두 교육을 당시 가장 시급한 일로 이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문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들의 창립을 지지하고, 교육에 적극적인 인물과 단체를 찬양하였다.<sup>34)</sup> 신문에

32) 유재진, 〈大韓每日申報의 민족주의적 성격〉(《한국언론과 이데올로기》, 文學과知性社, 1990), 101~103쪽.

33) 아래와 같은 논설에서 이러한 견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황성신문》, 1905년 3월 8일, 논설 〈國力振興在教育〉.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6·7일, 논설 〈務望興學〉.

《공립신보》, 1907년 12월 20일, 논설 〈보통교육이 문명의 근본〉.

34) 《황성신문》 기사에서 몇 건의 예를 들어보면, 〈聞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1906. 10. 4) · 〈賀長薰學校長李根培氏〉(10. 18) · 〈牛山學校의 有志人士〉(1. 21) · 〈畿湖學會의 三個人〉(1908. 10. 15) · 〈李禹珪·金容鎮兩氏의 高義〉(10. 22·23) · 〈偉



별도로 교육관계의 기사만을 소개하는 고정란을 두기까지 하였던 것이다.<sup>35)</sup> 반대로 신교육에 관심이 적던 지방에 대해서는 신교육의 실천을 권고하여 학교의 설립을 촉구하였다.<sup>36)</sup>

또한 여성교육과 여권신장을 비롯한 풍속개량에도 관심을 집중시켰다.<sup>37)</sup> 복장·위생·관습·미신 등의 개량 또는 타파를 주장하여, 근대적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실천하도록 권장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신문에 국가학·정치학·국제정치·역사 등 국민계몽에 필요하다고 인식한 분야나 농업·상업·공업 등 실제생활에 필요한 분야를 끊이지 않고 연재하고 있었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은 국민의 애국심 고양을 위하여 외적의 침입을 격퇴한 국내외의 영웅들의 전기를 연재하였다. 또 독립·혁명·혁신, 그리고 망국에 대한 외국사기에 관심을 가졌다. “(韓國人士의) 知識의 開發은 歷史가 緊要하니 盖其興亡得失之蹟이 可鑑戒勸 者”라고 한 점으로도 그러한 관심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특히 외국사기의 대부분은 梁啓超의 저작을 번역한 것이었다. 《황성신문》은 〈日本維新三十年史〉(1906. 5. 1~12. 31)·〈讀越南亡國史〉(1906. 8. 28~9. 5)·〈讀意大利建國三傑傳〉(1906. 12. 18~12. 28)·〈斯巴達小志〉(1907. 4. 5~4. 16)·〈滅國新法論〉(1907. 6. 11~5. 4) 등을 연재하였고, 《대한매일신보》는 〈波蘭末年戰史〉(1905. 8. 27~10. 13)·〈世界歷史〉(1910. 6. 3~8. 28) 등을 실었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도 촉구되었는데,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신채호의 〈讀史新論〉(1908. 8. 27~12. 13) 등의 사론과 함께, 국난극복의 영웅으로 〈水軍第一偉人 李舜臣〉(1908. 5. 2~8. 8)과 〈東國巨傑 崔都統〉(1909. 12. 5~1910. 5. 27)

---

哉三氏의 高義〉(10. 29)·〈金容鎮氏를 爲하야 又一拜〉(1909. 8. 21) 등 많이 나타난다.

35) 한말 신문과 잡지들의 교육관련 기사만을 정리한 것으로 李吉相 외 편, 《韓國教育史料集成》I-IX(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1994)가 참고된다.

36) 한 예로 《황성신문》은 경상도지역이 가장 개화에 부진함을 들어 1908년 6월 27일의 논설로 〈警告嶺南人士〉를 실어 비판한 바 있었다.

37) 예컨대 《제국신문》의 경우 崔起榮, 〈《帝國新聞》의 刊行과 下層民 계몽〉(앞의 책, 1991), 48~56쪽 참조.

崔起榮, 〈天道敎의 國民啓蒙活動과 《萬歲報》의 發刊(위의 책), 100~111쪽 참조.

38) 《大韓每日申報》, 1905년 10월 20일 〈歷史槩要〉.

의 전기를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한국사를 고구려-발해 중심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독사신문〉은 역사서술상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왕조중심의 전통 사관을 극복하여 민족주의사학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였다. 사실 한말 신문에 역사에 관련된 글들이 많이 실렸던 것은 당대 대표적인 역사가라고 할 수 있던 장지연·신채호·박은식 등이 모두 신문사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한말 신문은 국민계몽을 통하여 여론을 주도하였다. 신문에 관여한 인물들은 대체로 改新儒學者 출신의 ‘周邊人 marginal man’들이어서 비판적인 면이 강하였다.<sup>39)</sup> 비록 그들이 국민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지만, 국민대중이 여론형성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신문 발행이 가져온 주목되는 점이다. 따라서 한말 신문은 보도도 중시하였지만, 그보다 계도적인 기능이 매우 강조되었다. 그것은 신문 관여자들이 국민대중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愚民觀을 확인시켜 주는 점이기도 하나, 신문은 지배층뿐 아니라 국민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여론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이나 신교육운동, 신문화운동이 전개되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신문에 있었다.

그리고 신문체제와 형태의 기본적인 골격이 비록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또 일제에 대한 언론투쟁은 이후 한국신문의 저항민족주의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이에 대한 일제의 언론탄압 방법도 이후 한국사회의 어두운 일면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한말 신문은 정보의 대중화와 여론형성을 실현하며 문명개화와 민족주의의 당위 등을 강조하여, 신문매체의 중요성을 국민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 한말의 신문은 대중적인 기반 위에서 있던 것은 아니었다.

### 3) 일제의 언론규제

#### (1) 사전검열

일제의 언론규제는 1904년 2월에 발발한 러일전쟁 이후부터였다. 일본은

39) 李光麟, 〈개화기 한국의 신문〉(《韓國近現代史論攷》, 一潮閣, 1999), 74~75쪽.

군사관계의 내용과 외교문서의 신문게재 금지를 외부로 통하여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었다.<sup>40)</sup> 뿐만 아니라 1904년 4월에는 신문검열관의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까지 하였다.<sup>41)</sup>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정부에 제기된 신문 규제문제가 일본과 직결된 적이 적지 않았는데,<sup>42)</sup> 그것은 일본의 한국침략 기도를 한국신문들이 예리하게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일제는 러일전쟁 이후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국인 명의로 발간되던 신문들에 대한 사전검열을 실시하였다. 즉 1904년 8월 20일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의 주무원을 불러 군사상 사항의 신문게재 금지와 신문의 사전검열을 통고하였던 것이다.<sup>43)</sup> 이보다 일찍 7월 20일자로 한국주차 일본군사령관은 서울시 내외에 일본 군사경찰의 실시를 일방적으로 외부에 통고하였는데, 그 가운데 “집회 또는 신문이 치안에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정지시키고 관계자를 처분할 사. 단 신문은 발행 전에 미리 군사령부의 검열을 받게 함을 요함”이라고 하여 치안방해로 인정되는 신문의 정지 및 관계자의 처벌과 사전검열을 명시하고 있었다.<sup>44)</sup> 이 일본 군사경찰의 실시는 그 해 6월 말 일제가 한국정부에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7월에 한국민이 輔安會를 결성하여 그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45)</sup> 즉 일제는 일본 군사경찰의 실시를 한국정부에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한 달 만에 한국인 명의로 발행되는 신문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제국신문》과 《황성신문》 이외에 《대한매일신보》가 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은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던 영국인 배텔이었기 때문에 사전검열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그런데 10월 9일자 일본

40) 鄭晉錫, 〈民族紙와 日人經營新聞의 對立〉(《韓國言論史研究》, 一潮閣, 1983), 25~27쪽.

41)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편, 《舊韓國外交文書》日案 7(高麗大 出版部, 1972), # 7957 〈韓國新聞의 日軍行動掲載의 禁止 및 同檢閱官撰任要求〉.

42) 鄭晉錫, 앞의 글(1983), 24~25쪽.

43)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23일, 잡보 〈신문검열〉.

44) 《舊韓國外交文書》日案 7, # 8226 〈京城内外 日本軍事警察實施通告〉. 金正明 편, 《朝鮮駐劄軍歷史》(巖南堂書店, 1967), 211~212쪽.

45) 이에 관해서는 尹炳奭, 〈日本人의 荒蕪地開拓權要求에 대하여〉(《歷史學報》22, 1964)와 愼鏞廈, 〈구한말 輔安會의 창립과 민족운동〉(《한국사회운동의 기반과 새 경향》, 문학과지성사, 1994)에 상세하다.

군의 <군정시행에 관한 內訓>에서도 7월 20일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집회 혹은 신문·잡지·광고 등의 치안에 방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해산 또는 금지시킬 사”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내훈이 있던 10월 9일 《제국신문》이 일본군헌병사령부에 의하여 정간처분을 받았다. 《제국신문》 1904년 11월 9일자 논설 <본신문 덩지호얏던 스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거월(10월) 구일 일요일에 신문을 방장 발간할 즈음에 하오 스시랑에 일본 헌병스령부 위관 일인과 하스 일인과 헌병 오인과 통변 일인이 와서 스령부 명령으로 말하기를 본월 칠일 대국신문 논설스의가 일본군스상에 방히요 한일랑 국교제에 방히요 치온에 방히되는 말을 니얏스니 신문을 덩지호라호고 방장 절반쯤 인쇄호던 신문과 기게고동을 빼서 고봉호고 가는지라…

이 논설에 따르면 신문의 사전검열이 일본군의 통고가 있는 8월부터 시행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월 이후가 아니었나 짐작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사의 삭제와 정간처분이었다.

1904년 하반기부터 일제에 의하여 자행된 사전검열은 1905년 2월 이후 警務顧問部로 이관되어 계속되었다. 경무고문부는 1905년 2월 4일 丸山重俊이 경무고문에 취임하면서 개칭한 것으로, 일본군사령부의 사전검열 업무를 인계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신문에 반일 기사를 게재하면 한국민의 반일의식이 확산될 것이므로 반일적인 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열의 과정은 《제국신문》 1906년 3월 21일자 논설 <停報와 解停>에 잘 나타나 있다.

신문을 미일 편집하야 박힐 씨에 경무고문실에 가서 검열을 것친 후에야 인쇄호는디 만일 검열호는 일인이 그더로 인가호면 그더로 박히고 무삼 귀절이딘지 너지 말라고 살을 쳐주면 부득이 호야 그 귀절은 그 즈를 뒤집어 박히는디 만일 그 즈리에 다른 말을 치우랴면 또 검열을 밋아야 홀 터인데 미양 날은 저물고 치울 멀도 업서서 남이 알아 볼 슈 업시 되는 것인디…글즈를 뒤집어 낫는 씨에 혹 뒤집어 노키도 호고 혹 그저 두기도 호야…

즉 사전검열은 인쇄한 신문臺帳을 경무고문부에 가지고 가 검열을 받고,

검열에 걸리면 그 부분은 활자를 뒤집어 인쇄하거나 공백으로 인쇄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벽돌신문’이었다. 사전검열에 대하여 독자층은 일본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실어도 한국신문에서는 검열로 삭제된다고 하여 《대한매일신보》밖에 볼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sup>46)</sup> 독자층의 신뢰 감소 또는 불신은 신문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전검열과 행정처분은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1904·5년에 국한되지 않고 있었다. 1907년 7월 ‘光武新聞紙法’의 제정은 이 같은 규제를 법제화한 것이기도 하였다.

1906년 7월에 이르면 경무고문부뿐 아니라 한국정부에서도 신문규제를 시도하였다. 중추원에서 신문조례를 심의하여 곧 반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하였던 것이다.<sup>47)</sup> 그것은 신문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 친일정권과 관련된 정치문제와 관리들의 비행을 폭로하였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 신문규제법을 준비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신문규제법은 반포되지 않았다.<sup>48)</sup>

## (2) 〈신문지법〉의 제정

1907년 4월부터 통감부에서는 신문규제법의 제정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통감 이등박문은 한국정부 대신들과의 정례모임에서 신문규제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통감부에서 신문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국채보상운동의 주도를 비롯한 민족신문의 국권회복운동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통감부와 친일정권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반일언론활동과 정부비판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통감부에서는 1906년부터 비밀리에 배텔의 추방공작을 획책하고 있었으나 영국정부와의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1월 16일자에 고종이 을사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밀서를 게재하여 일본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바 있었다.

따라서 이등박문은 1907년 5월 30일에 한국정부 대신들과 가진 ‘韓國施政改善에 관한 협의회’에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뿐만 아니라 일본인 및 영

46) 《帝國新聞》, 1907년 4월 9일, 잡보 〈丸山顧問과 各新聞記者〉.

47) 《萬歲報》, 1906년 7월 6일, 잡보 〈新聞條例制定說〉.

48) 崔起榮, 앞의 책(1991), 255~257쪽.

국민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신문규제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6월 18일의 같은 모임에서는 법안의 초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였다.<sup>49)</sup> 신문규제법의 초안은 주로 일본의 신문지조례에 기초한 것으로 체형과 벌금,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포함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문규제법이 한국정부의 발의로 법안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감부에서 법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sup>50)</sup>

법률 제1호 <신문지법>은 1907년 7월 24일자로 반포되었다. 7월 24일은 흔히 ‘丁未七條約’이라 불리는 <韓日新協約>이 체결되어, 顧問政治라고 불리던 일제의 내정간섭 형태가 次官政治로 옮겨 가던 시기였다. 바로 7월 18일에 있는 고종의 황태자양위가 7월 20일 일제에 의하여 고종의 퇴위로 바뀌면서 한국의 정국이 혼란에 빠진 직후였던 것이다. 7월 27일자로 법률 제2호 <保安法>이 반포되고, 8월 1일 군대해산이 이루어졌다.

<신문지법>은 부칙 3개조를 포함하여 모두 38개조로 되어 있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신문발행의 수속과 관련된 일반규칙이었다. 발행허가의 절차, 신문사 임원의 자격, 보증금, 발행사항의 변경, 납본 등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신문게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언급되었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필수 게재사항이었다.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신문의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었으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는 부칙조항이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먼저 신문의 발행은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부대신은 安寧秩序・風俗壤亂이라는 막연한 범위를 규정하여 신문에 대한 발매・반포의 중지와 압수, 발행의 정지와 금지를 행정처분으로 명령할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신문지법>이 신문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자 제정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300환의 납부 또한 재정이 취약한 한국인 발행신문에 대한 간접적인 탄압조항이었다. 한국정부에서도 이 조항이 과중함을 인식하여 통감에게 그 수정을 건의한 바 있었으나,<sup>51)</sup>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전검열을

49) 《日韓外交資料集成》6—상(東京；巖南堂書店, 1964), 488・525~526쪽.

50) 崔起榮, 앞의 책(1991), 257~268쪽 참조.

51) 《日韓外交資料集成》6—상, 556쪽.

의미하는 납본은 이미 언급한 대로 1904년 10월경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신문게재 금지사항으로는 황실존엄의 모독, 국헌문란, 국제교의의 저해 등이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반일관계 기사의 게재를 금지하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 보도판제조항에는 기밀에 관한 공문서와 기사가 해당되었다. <신문지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관련자의 벌금형과 체형 혹은 인쇄기계의 몰수 등과 신문의 압수·정간 등 가혹한 행정처분이 주를 이루었다.<sup>52)</sup> 신문지법의 대부분 조항은 일본의 신문지조례(1883년 제정, 1887·1897년 개정)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수정한 것이었다. 특히 허가제나 내부대신의 행정처분권과 같은 조항 등은 신문지조례의 개정에서 삭제되었던 부분인데, 신문지법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즉 신문지조례에 설정된 적이 있던 조항 가운데 신문탄압과 직결되는 강력한 조항은 일본에서의 완화와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법 제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쉽게 짐작케 한다.<sup>53)</sup>

<신문지법>의 제정에 대하여 민족신문들의 반발은 《황성신문》이 법령 반포 전인 7월 12일자에 <新聞條例에 對한 感念>을 싣고, 이어 10월 11일자 의논설로 <新聞束縛의 條例>에서 “吾輩는 政府에서 此等條例를 速히 繳鎖하던지 經히 刪定하야 人民의 言論自由를 許하고 束縛的 主意를 除去하야 開明의 前途를 發達케 함을 希望하노라” 하여 그 폐지나 개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신문지법>에 대한 여론은 “이제 더러케 싸다로운 법을 마련하였스니 신문이 엇지 정부관리의 득실과 일반인민의 선악을 의문하리오 이제는 신문과자 노릇할 슈도 업슬 것이오 신문이라고 볼 것도 업스리라”는 반응이었다.<sup>54)</sup>

### (3) <신문지법>의 개정

통감부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신문지법>을 제정하도록 한 본래의 목적은 《대한매일신보》의 규제에 있었다. 그러나 <신문지법>은 한국인의 명의로

52) 崔起榮, 앞의 책(1991), 266~277쪽 참조.

53) 일본 신문지조례와 대한제국의 신문지법의 비교에 관해서는 崔起榮, 앞의 책(1991), 274~276쪽 참조.

54) 《帝國新聞》, 1907년 8월 8일, 논설 <신문지법을 평론함>.

발행하는 신문에만 적용되었다. 이미 이들 신문은 사전검열과 정간조치를 통하여 규제가 가능하였으므로, 실제 <신문지법>은 그것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인 발행의 신문은 1907년 7월 24일자로 개정된 별도의 <保安規則>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sup>55)</sup>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던 영국인 배텔을 지목하여 <신문지법>의 제정이 논의되었지만, 실제 반포된 법령에는 그 적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 아마도 일제는 영국측과의 외교교섭이 진행중인데다가, 고종의 퇴위라는 급작스런 한국정세의 변화 때문에 <신문지법>의 반포를 서둘렀던 것 같다. 그러나 <신문지법>은 오히려 《대한매일신보》의 성가를 더욱 높여 준 셈이었다. 따라서 통감부에서는 《대한매일신보》를 주된 목적으로 <신문지법>의 개정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지법>의 개정에는 《대한매일신보》와 함께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내에 유입되던 교포신문에 대한 규제도 계획되어 있었다. 미주 본토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공립신보》와 그것을 계승한 《신한민보》, 하와이에서 발행되던 《합성신보》와 그것이 개제된 《신한국보》, 그리고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행되던 《희조신문》과 《대동공보》는 1908·1909년에 걸쳐 상당수 유입되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신문은 국외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일제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아, 반일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와 교포신문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 통감부의 <신문지법> 개정의 움직임은 1908년 4월 20일자 법률 제8호 <신문지법> 개정으로 드러났다. 친일정권으로 하여금 <신문지법>을 개정하게 한 일제의 목적은 제34조에 명확하다.

外國에서 發行한 國文 或 國漢文 又は 漢文의 新聞紙와 又は 外國인이 內國에서 發行한 國文 或 國漢文 又は 漢文의 新聞紙로 治安을 妨害하며 又は 風俗을 壞亂함으로 認하는 時는 內部大臣은 該新聞紙를 內國에서 發賣頒布함을 禁止하고 該新聞紙를 押收함을 得함<sup>56)</sup>

55) 《統監府公報》, 1907년 7월 27일.



즉 이 개정은 교포신문과 국내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한 규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란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이 1908년 4월 30일자로 반포된 〈新聞紙規則〉으로 〈신문지법〉에서 제외되었으므로,<sup>57)</sup> 천주교와 기독교의 선교사들을 발행인으로 하고 있던 신문과 《대한매일신보》뿐이었다. 종교계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부분적으로 《경향신문》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대한매일신보》를 규제대상으로 삼았음이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신문지법〉의 개정에도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사전검열은 불가능하였다. 《대한매일신보》가 이후에도 여전히 일제의 국권침탈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용과 논조에 따라 압수만이 가능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압수처분은 이미 상당 분량의 신문이 배부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지법〉 개정 직후부터 《대한매일신보》와 교포신문의 압수처분이 줄어 있었다. 국교저해 · 폭도선동 · 질서문란 · 국권회복 · 凶行선동 등이 압수의 이유였다. 1908 · 1909년 신문의 압수상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1908 · 1909년 신문압수상황<sup>58)</sup>

연도	신문	大韓每日申報	共立新報	합성신보	희조신문	大同公報	계
		국 문	국한문	新韓民報	新韓國報	大東共報	
1908	A	5	8	19	10	20	65
	B	4,936	6,727	10,264	542	1,569	24,706
1909	A	7	7	35	31	57	137
	B	3,592	12,722	1,217	1,181	2,235	20,947
계	A	12	15	54	41	77	202
	B	8,528	19,449	11,481	1,723	3,804	45,653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은 15회의 압수처분에 매회당 1,300부 정도가 압수되고 있었으며, 《공립신보》와 《신한민보》의 경우를 보면 거의 매호가 압

56) 《舊韓國官報》, 1908년 4월 29일, 법률.

57) 《統監府公報》, 1908년 5월 2일.

58) 《統監府施政年報》 해당연도분과 《警察事務概要》 등을 참고로 재작성. A는 발행반포금지 횟수, B는 압수신문부수를 의미한다.

수처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통감부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관여자, 즉 사장 베델과 총무 양기탁을 사법처분하고자 시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통감부는 1907년 10월 9일 서울주재 영국총영사에게 베델을 고소하였으나 추방에 실패하였다. 일본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1908년 5월 27일자로 다시 베델을 질서문란과 폭동격려, 그리고 한국의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는 죄명으로 고소하였다. 그 결과 베델은 3주간의 禁錮와 보증금의 납부라는 판결을 받아, 상해로 가서 금고형을 받았다. 통감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베델이 상해에서 복역중이던 1908년 7월 양기탁을 국채보상금의 횡령혐의로 구속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의 저지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였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양기탁의 구속사건은 영국정부가 항의하여, 양기탁은 2개월이 지난 9월 29일에 석방되었다.<sup>59)</sup>

결국 일제는 〈신문지법〉의 제정과 그 개정으로 한국에서의 반일언론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일제가 이처럼 신문규제에 열심이었던 까닭은 신문의 국권회복운동이 그만큼 한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확산은 언론활동에 힘입고 있었다.<sup>60)</sup> 따라서 일제가 신문의 어떠한 내용에 주목하였는가를 살펴본다면, 당시 언론이 지향하던 바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장황하지만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4일자(의)의 논설 〈所謂新聞押收處分〉을 인용한다.

邇來로 内部에서 動搖 治安妨害 四字에 藉하야 本報及海外韓人同胞의 發行  
하는 新紙를 押收하기에 吾儕는 彼の 治安妨害라云는 範圍의 廣狹이 如何한  
지 不知하야 甚訝하며 甚鬱하엿더니 今에 内部 警務局에서 發行한 隆熙三年 警  
察事務概要의 中에 右各紙 押收된 內容을 掲載하얏는디 左와 如하니

國權回復의 名을 藉하야 日本保護를 反對하야 反旗를 揭호을 鼓吹한 者

日本の 保護를 目하야 韓國을 并呑함이라고 誣하야 一般韓民의 反感을 起케

59) 이에 관해서는 崔竣, 〈軍國日本の 對韓言論政策〉과 〈梁記者拘束을 에워싼 英·日 간의 外交交渉〉(앞의 책, 1976) 및 鄭晉錫, 앞의 책(1987)을 참고할 것.

60) 이 문제에 관해서는 崔竣, 〈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 캠페인〉(위의 책, 1976)과 鄭晉錫, 〈國債報償運動과 言論의 역할〉(《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을 참조할 것.

흔 者

無근의 流說을 傳하야 人心을 惑亂케 하고 又는 事를 誇大히 布張하야 國民을 憤慨케 하야 官의 施設을 妨碍하고 社會의 秩序를 攪亂흔 者

國權回復은 國民의 共同一致를 要한다 하야 團體의 組織을 獎勵흔 者

國權回復은 國民의 文明을 要한다 하야 新教育의 普及을 唱導흔 者

海蔘威地方으로써 韓國人의 國權回復團體의 根據지 습기를 鼓吹흔 者

暗殺者를 義士라 하야 此思想을 鼓吹함을 努力흔 者

暴徒를 言하야 國歌에 忠흔 者라 하야 此에 聲援을 與흔 者…

噫라 團體組織의 獎勵도 治安妨害라 하며 新教育普及의 唱導도 治安妨害라 함은 果然 不可思議의 一奇法이로다 然則 團體를 渙散케 함이 治安이며 新教育을 沮碍함이 治安인가 其心中에 此思想이 有할지라도 엇지 如此히 和盤托出하느냐…

일제가 ‘치안방해’라는 명목으로 민족언론을 탄압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권회복과 국민단결에 관련된 논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권회복을 내건 일본의 보호 반대와, 단체조직과 신교육의 지원, 의열투쟁의 찬양, 의병 옹호 등이 일제가 문제로 삼은 내용이었다. 그것으로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화에 반대하는 조그마한 저항이라도 봉쇄하고자 하였던 사실과, 신문을 중심으로 한 민족언론의 저항이 국권회복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논조로 다양하게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崔起榮〉